
2023~2027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23. 4.



농림축산식품부

순 서

I. 계획의 수립 배경 및 성격	1
1. 계획의 수립 배경	1
2. 계획의 성격	2
II. 2018~2022 농정평가 및 향후 전망	3
1. 2018~2022 농정 평가	3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 및 전망	7
III. 2023~2027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과제 및 추진방향	11
1. 발전계획 주요 과제	11
2. 발전계획 추진 방향	12
3. 비전·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13
IV. 2023~2027 농정과제 실천계획	14
1. 굳건한 식량 안보 확보	14
2.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20
3.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38
4.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47
5.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57
V. 농정 추진기반 정비	67
VI. 농업·농촌·식품산업 투융자 재원확보 방안	69
VII. 기대 효과	70

I. 계획의 수립 배경 및 성격

1. 계획의 수립 배경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5년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농업·농촌의 힘찬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 및 농정목표 설정
 -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가경영 안정,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
 - 새정부 정책 기조, 국정 목표에 따라 새로운 농정 목표 정립
- 새정부의 국정과제, 농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계획 제시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등을 위한 농정 방향과 전략 제시
 - 시장, 경쟁, 자율, 창의 등의 핵심 가치로 세부 계획 수립·이행

◆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농업·농촌의 **중장기 로드맵** 설정하여 **농업의 도약 기틀 마련**

2. 계획의 성격

□ 계획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전국
- 시간적 범위 : 2023~2027년
- 기관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소속 기관), 농진청(연구개발 및 지도), 산림청(임업, 산림, 산촌) 소관업무

□ 계획의 주요 내용(기본법 제1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소비 확대 시책
 - * 대상: 식용 쌀·보리류, 곡물, 소·돼지·닭고기, 우유, 조사료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부 시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 계획의 성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법정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미래 발전상 제시 및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상위계획
- 매년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실행계획

□ 계획의 수립 체계

- 전문가·농업계 의견수렴과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국회 제출

Ⅱ. 2018 ~ 2022 농정 평가 및 향후 전망

1. 2018 ~ 2022 농정 평가

◆ 지난 발전계획의 4대 분야별 주요 추진과제 실적 평가

- ①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②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 ③ 안전한 먹거리공급체계 구축, ④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1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주요 성과]**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확대 등 유통경로 다양화를 통해 유통 혁신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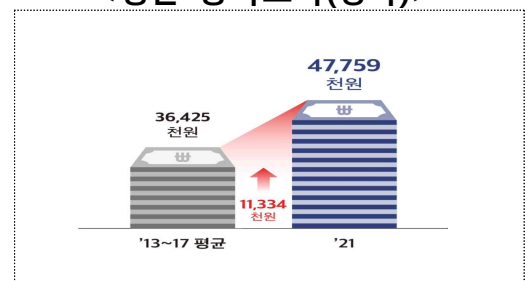
○ 공익직불제 도입('20.5.)으로 쌀 중심 직불제 체계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소득 안정화 기여

○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 확대

* 가입률('22): 50.0%(목표 대비 125%)

** 공동이용 농가 비율('22): 36.4%(목표 대비 121.2%)

<평균 농가소득(명목)>



○ 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자 조직 육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온라인거래소 시범사업('20~)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 혁신 촉진

* 기초 생산자조직(개소): ('17) 2,405 → ('22) 3,318(목표 대비 110.6%)

* 직거래 규모(조원): ('17) 3.2 → ('21) 8.8('22년 목표 210% 조기 달성)

□ **[미흡한 점]** 쌀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생산감축 다소 미흡

○ 쌀 가공산업*은 목표 대비 크게 성장하였으나, 쌀 생산조정제도 실시('18~'20)에도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 저조

* 쌀 가공산업 매출액(조원): ('20) 7.3(목표 대비 122%) → ('22.9) 7.5

** 벼 재배 면적(천ha): ('17) 755 → ('19) 730(목표: 655) → ('22) 727

2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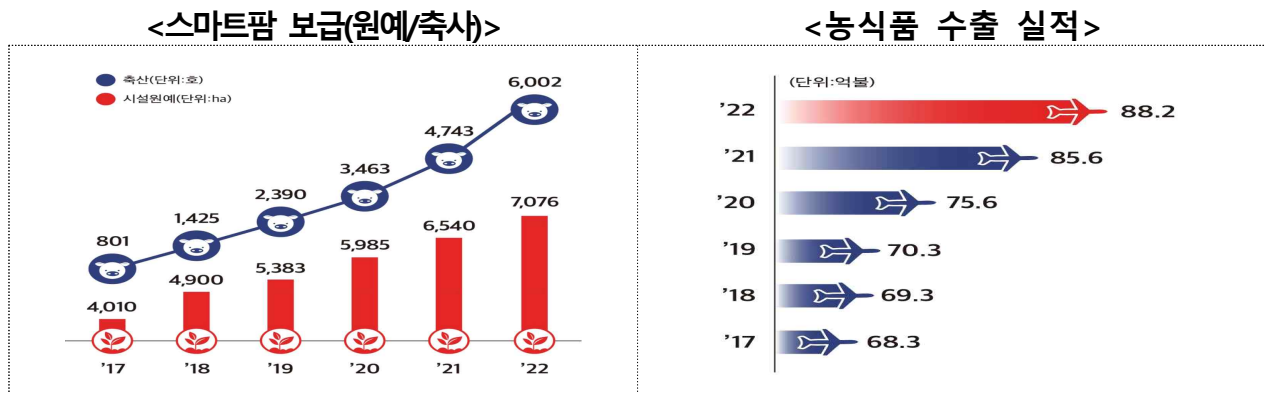
□ **[주요 성과]** 스마트팜 육성 및 농식품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성장 기틀 마련

○ 농업 생산 분야 스마트팜 보급 확산으로 농산업 혁신 기반 조성

* 스마트팜(원예/축사): ('17) 4,010ha, 801호 → ('22) 7,076ha, 6,002호(목표 대비 101%, 104%)

○ 농식품 분야 수출이 꾸준히 증가, 특히 '22년 4분기 급격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수출 확대

* 농식품 분야 수출액(억불): ('17) 68.3 → ('22) 88.2(목표 대비 98%)



□ **[미흡한 점]** 신규인력 유입, 친환경농업 관련 추진실적 저조

○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청년농 육성을 확대했으나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 불과, 식품·외식분야 취업자 수 목표치 미달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천명): ('18) 1.6 → ('22) 8.6 / 청년농 비중: ('20) 1.2%

* 식품·외식분야 취업자 수(만명): ('17) 260 → ('22) 264(목표 대비 91.3%)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이 목표 대비 저조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친화형 농축산업으로의 전환 다소 미흡

* 인증면적 비율(%): ('17) 4.9 → ('22) 4.6(목표 대비 58%)

3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 **[주요 성과]** 국가·지역 단위의 먹거리정책 추진 체계 마련 및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 및 먹거리 신뢰 확보

○ 국가·지역 푸드플랜 수립으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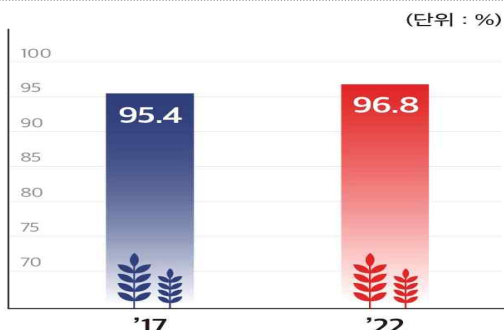
* 푸드플랜 수립 지자체 수('22): 137개소(목표 대비 137%)

○ 초등학생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18~), 저소득층 농식품 바우처 지급('2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사업 도입('22) 등 어린이,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 강화

* 식생활 만족도(%): ('22) 51.9(목표 대비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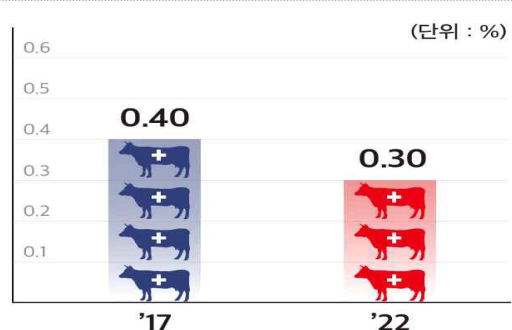
○ 원산지 표시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 감소 등 소비자 신뢰 확보 노력

<원산지 표시 이행률>



목표 대비 100.3% 성과 달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률>



목표대비 120% 성과 달성

□ **[미흡한 점]** 식량자급률, HACCP 인증률 등이 목표치에 미달

○ 식량자급률 상승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농지면적 감소 등에 따른 국내 생산 감소 영향으로 최근 5년간('17~'21) 지속 하락 추세

-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자급률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대외 충격에 취약

* 식량/곡물 자급률('21): 44.4%(목표 대비 80.1%)/20.9%(목표 대비 76.6%)

○ HACCP 인증 실적이 목표 대비 미흡,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 강화 필요

* HACCP 인증률(%): ('17) 39.2 → ('22) 42.7(목표 대비 85.4%)

4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 **[주요 성과]**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 공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농촌의 삶터·일터·쉼터로의 기능 재생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간 농촌협약을 도입('20)하고 공간계획 기반으로 통합 예산 지원*

* 농촌 재생프로젝트(개소, 생활권): ('21) 12 → ('22) 32

-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거점 확대, 여성농 특수건강 검진 도입('22),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 육성 등 농촌에 특화된 생활·복지 서비스 확대

* 농촌 생활거점(개소): ('17) 67 → ('22) 1,651(목표 대비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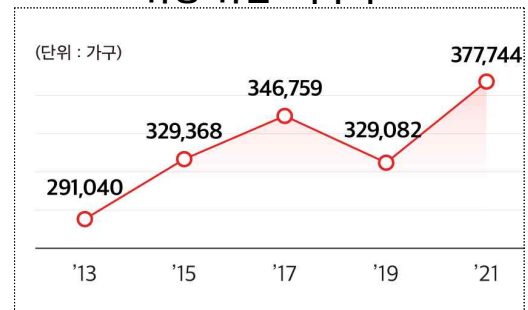
* 사회적 농장(개소): ('18) 9(신규) → ('22) 83(목표 대비 119%)

- 농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청년층 농촌 유입이 확대되는 등 귀농·귀촌 증가 추세

* 귀농·귀촌 가구 중 30대 이하 가구수:

('17) 148천 가구 → ('21) 159

<귀농·귀촌 가구수>



□ **[미흡한 점]** 교통, 주거, 의료 등 정주 여건이 도시 대비 부족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촌관광이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저하

- 농촌주민 정주 만족도 목표치 미달 등 도농간 삶의 질 격차 여전

* 농촌주민 정주 만족도('22, 10점 만점): 5.3점(목표: 6.50)

- 농촌관광객 수는 '19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으로 농촌관광객 수가 급감한 후 최근 회복 추세

* 농촌관광객수(만명): ('15) 871 → ('19) 1,307 → ('22) 928(목표 대비 69%)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 및 전망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주소

□ 낮은 식량 자급률은 식량안보의 취약 요인

- 농지면적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2%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논 면적이 더 빠르게 감소

* 논/밭 면적 변동 추이(만ha): ('00) 115 / 74 → ('10) 98 / 73 → ('21) 78 / 77

- 쌀을 제외한 밀·콩·옥수수 등 주요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 하락 추세

- 식량자급률은 국내 생산 감소 영향 등으로 '80년대 이후 지속 하락 추세이며, '21년 기준 식량 자급률 44.4%, 곡물 자급률 20.9%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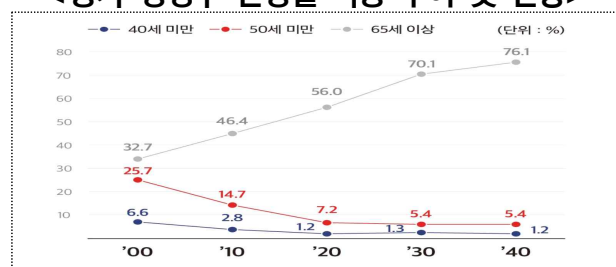
* 식량자급률 추이(%): ('17) 51.9 → ('18) 50.3 → ('19) 49.3 → ('20) 49.3 → ('21) **44.4**

* 곡물자급률 추이(%): ('17) 25.6 → ('18) 24.1 → ('19) 23.3 → ('20) 22.4 → ('21) **20.9**

□ 농식품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혁신시킬 인력, 기술 부족

-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업의 혁신을 이끌 청년농 유입이 지연되면서 빠른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할 핵심 인력 부족

<농가 경영주 연령별 비중 추이 및 전망>



- 산업 전 분야에서 신기술과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도 ICT·푸드테크 등 신기술 발전 및 활용이 더딘 상황

* 스마트농업 국내 기술 수준은 선진국(EU) 대비 70% 수준(KISTEP, '20)

* 푸드테크 국내 기술 수준(최고 기술 보유국가 100점 기준): 식품프린팅 38.2점(KREI, '19), 로봇 80.0(KISTEP, '20), AI 87.4(IITP, '19)

□ 농가경영 불확실성 증대는 안정적 경영 저해

- 인건비, 투입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가격변동·재해 등 수급불안 요인 가중으로 농가경영의 불확실성 확대

* 농업경영비(천원): ('17) 20,533 → ('19) 24,175 → ('21) 24,229

- 영세농, 고령농의 경우 생활 안정 수단 부족으로 대내외 충격에 더 취약

- 영세한 경영규모,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을 활용한 농업 분야 투자 부족 등으로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둔화

* 농업 노동생산성(원/시간): ('17) 21,444 → ('18) 18,003 → ('19) 16,912 → ('20) 17,990

□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 및 먹거리 안전 문제 지속

- 정부의 수급 안정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반복되는 등 수급 안정 효과 미흡

* 농산물 소비자 물가지수: ('17) 89.68 → ('19) 93.98 → ('21) 108.32

-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있지만 안전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 식품 수거검사 부적합 건수(건): ('13) 1,081 → ('17) 1,083 → ('20) 1,036 → ('21) 1,005

□ 농촌 난개발 및 도농간 삶의 질 격차

- 국민의 기대와 달리 각종 난개발 등으로 농촌 경관 및 주거환경이 훼손되어 농촌의 농촌다움 상실

- 보건·복지, 정주 기반, 일자리 등 필수 생활 서비스에 대한 농촌 지역 만족도가 도시와 비교 시 여전히 낮음

<서비스 부문별 도시/농촌 만족도>



□ 기후변화,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식량안보 중요성 증대

-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증가, 경지면적 감소* 등 공급 측면의 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지면적(천ha, KREI): ('21) 1,547 → ('27) 1,503 → ('32) 1,480

- 미중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식량 보호 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있어 식량안보 문제 상시화 우려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한계·기회 요인 상존

- 농가인구 감소, 농가 고령화 심화 등이 전망되어 농업의 경쟁력 확보 및 혁신동력 창출에 한계

* 농가호수(만호, KREI): ('21) 103.1 → ('27) 98.2 → ('32) 95.7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율(% , KREI): ('21) 46.8 → ('27) 47.7 → ('32) 52.0

- 농업부가가치율은 '27년까지 상승하나, '32년 소폭 감소가 전망되는 등 농업 성장 정체에 직면

* 농업부가가치율(% , KREI): ('21) 53.8 → ('27) 56.2 → ('32) 55.9

-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혁명은 전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등 농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

* 산업 내 디지털 기술을 도입한 기업 비중이 10%p 늘어날 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1~2%p 정도 확대(한국은행, '21)

□ 불확실한 대외 여건 등으로 농가경영 어려움 가중 우려

- '22년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농업교역조건지수가 악화된 이후 더디게 회복될 전망으로 농가의 안정적 경영 불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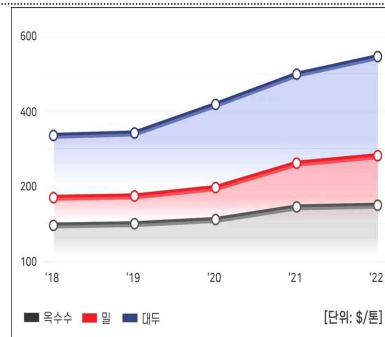
* 농업교역조건지수(% , KREI): ('21) 112.2 → ('22 추정) 86.7 → ('27) 95.3 → ('32) 93.7

-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농가 경영의 불확실성 요인 지속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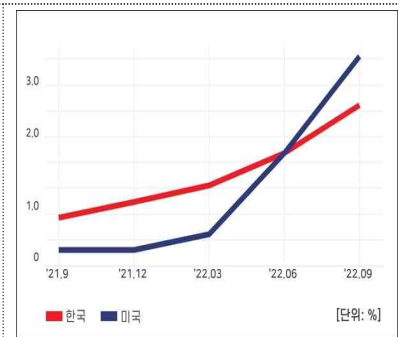
<원자재 가격 추이>



<국제곡물 가격>



<기준금리 추이>



□ 유통 · 소비 구조 변화 가속화 전망

- 코로나19,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온라인 유통 확대*와 같은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가 가속화되고 농축산물 안전에 대한 관심 지속 예상

* 온라인쇼핑 농축수산 거래액(통계청): ('18) 2.9조원 → ('19) 3.7 → ('20) 6.6 → ('21) 8.3

-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은 취약계층 먹거리 불균형 가중 우려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식품비 지출액은 '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67~72% 수준에 불과

□ 농촌소멸 위기 속에서 농업 ·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 '10~'20년 농촌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출산율 저하 등으로 '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회서비스 공급 어려움 예상

* 농촌 인구 전망(만명, KREI): ('20) 970 → ('30) 943

* 인구 3만명 이하 농촌 시·군(개, KREI): ('20) 19 → ('30) 27

- 국민이 농업에 기대하는 가치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은 우리 농업·농촌의 긍정적 요인

* 은퇴 후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22) 37.2
(희망 이유: 쾌적한 환경 >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 > 농업경영 순)

<농업의 기능 중요도>



Ⅲ. 2023 ~ 2027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과제 및 추진 방향

1. 발전계획 주요 과제

◆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및 대내외 여건과 전망을 반영하여
5대 분야 중점 추진 과제 설정

①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여 **균건한 식량 안보 확보**

- 식량자급률 제고 및 안정적인 곡물 조달을 위한 해외 공급망 확보
* 밀/콩 자급률(%): ('21) 1.1/23.7 → ('27) 8.0/43.5

② 농업의 도약을 위해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

-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스마트농업 보급률(%): ('22) 온실 12.8, 축사 19.8 → ('27) 온실 30, 축사 30
* 농식품 수출 실적(억달러): ('22) 88.2 → ('27) 150
- 농업환경 개선 및 동물보호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연관 산업 활성화
* '18년 농업 분야 탄소 배출량 기준 '30년까지 22.5% 감축
* 반려동물 등록률(%): ('21) 55 → ('27) 70

③ 든든한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

- 직불금 확대와 위험관리 체계 구축으로 농가경영안정 기반 확충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달성

④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을 위한 체계 구축

- 농축산물 유통 구조 및 수급관리 체계 개선, 농산물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 유통비용 절감(%): ('22) 48 → ('27) 45

⑤ 농촌주민·도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 농촌공간의 쾌적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및 복지안전망 확충
* 농촌 삶의 질 만족도(점): ('21) 5.7(도시 6.5 수준) → ('27) 6.7

2. 발전계획 추진 방향

◇ 농업·농촌 및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국내 생산·비축 확대 및 해외공급망 확충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전환 및 동물 복지 강화
- 이민제도 연계 등을 통한 국내외 농업인력 확보로 선제적 미래 대비
- 농촌공간계획 제도 도입·농촌 재생 지원 등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업 혁신**

- 창의적인 젊은 인재 중심으로 농식품 인력구조 고도화
- 생산·유통·소비 등 농식품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 그린바이오산업, 푸드테크 등 첨단기술 접목 및 산업간 융합
- K-Food⁺의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로 R&D·창업·마케팅 전략 추진

◇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반영하는 **농정 추진**

- 민간 투자 활성화 및 농업경영체에 기업 경영 방식 도입
- 농산업 전후방산업에 기업의 자본력·기술력 활용 강화
- 민간의 창의성 극대화를 위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 개선

◇ 농업인·소비자 등 **고객맞춤형 농정** 추진

- 농축산물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개선 및 주요 품목 가격 안정 도모
- 안전·고품질 농식품 공급 및 로컬푸드 확대 등 소비자 신뢰 확보

◇ 영세·고령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연대·상생협력)** 강화

-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직불·보험 등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 농식품바우처 등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 농촌 주거 등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복지서비스 확충

3. 비전 ·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

전략	성과목표		세부추진과제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식량 자급률 제고 국내 비축 및 해외곡물 유통망 안정적 확보	· 식량자급률: (‘21) 44.4% → (‘27) 55.5 · 밀/콩 자급률: (‘21) 1.1/23.7% → (‘27) 8.0/43.5	○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식량작물 생산·소비체계 전환 ○ 농지 관리 체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 국내 비축 및 해외 곡물 유통망 안정적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미래에 적합한 농업으로 전환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 청년농 3만명 육성 · 스마트농업 보급률: (‘22) 온실 128% 추사 198% → (‘27) 30, 30 · k-Food* 수출 목표: (‘22) 118억달러 → (‘27) 230	○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 스마트농업 확산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 ○ R&D 혁신 및 기술창업 활성화 ○ 전략적 국제협력 농정 추진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 푸드테크 산업 육성 ○ K-Food* 수출 확대 ○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및 제도정비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직접지불제도 개편 농가 경영 여건 개선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달성 · 농식품펀드 1조원 추가 결성	○ 농업 재해 피해 지원 ○ 농업 경영위험 대응 ○ 직접지불제도 개편 ○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농축협의 경제사업 강화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농축산물 유통구조 및 수급관리 체계 개선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	· 유통비용 절감: (‘20) 48% → (‘27) 45 ·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 (‘18~‘22) 14.4% → (‘23~‘27) 13.4	○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 농축산물 자율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 ○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사전 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원산지 표시 등 소비자 신뢰 확보 ○ 가축 방역체계 고도화 및 민간책임성 강화 ○ 고품질 농식품 공급 ○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보장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 농촌 삶의 질 만족도: (‘21) 5.7점 → (‘27) 6.7 · 농촌 융복합산업규모: (‘22) 3.6조원 → (‘27) 5	○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농촌 재생 지원 ○ 농촌 정주여건 개선 ○ 농촌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 여성농업인, 농촌 거주 여성 지원 ○ 농업·농촌 소득 기반 다각화 ○ 귀농·귀촌 활성화 ○ 농촌 교류·체류 활성화

추진 기반

혁신농정, 현장소통 · 지방중심 농정

IV. 2023 ~ 2027 농정과제 실천계획

1. 굳건한 식량 안보 확보

□ 정책 여건

- 국내 식량 자급률은 경지면적 감소*와 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으로 '15년 이후 지속 하락세

* 경지면적 변동 추이(만ha): ('00) 189 → ('10) 172 → ('21) 155(10년간 연평균 Δ 1.2%)

- 국제곡물 공급망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불안정성 심화

* 국제곡물 가격('22.12월): (밀) 평년 대비 약 1.3배 상승, (대두) 1.4배, (옥수수) 1.6배

* 수출 제한조치: (러시아) 콩, 해바라기씨유 등, (인도) 밀·쌀, (조지아) 밀, 보리 등

□ 2023 ~ 2027 정책 추진 방향

· 쌀은 공급 과잉 구조,
밀·콩 등의 국내 자급기반 취약



· 밀·콩·가루쌀 중심 생산·소비 기반
확충으로 식량자급률 상승 추세로 전환

- 가루쌀 육성, 전략작물직불제 등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전략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계약재배, 제품개발 지원 등으로 新수요 창출

* '27년까지 식량자급률 전체 55.5%, 밀 8.0%, 콩 43.5% 달성

- 농지 관리목표 설정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 등 농지 관리 체계화

* 농지면적 감소 추세 목표: ('17~'21) 연평균 Δ 1.2% → ('21~'27) 연평균 Δ 0.5

- 기후변화 대비 첨단기술을 활용한 물사용 효율성 제고, 간척지 다각적 활용 촉진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농업 SOC 체계 개편

-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비축 확대, 해외곡물 유통망 확충 및 국제 식량안보 협력 강화 등 추진

* 해외 유통망 확보 목표(개소): ('22) 2 → ('27) 5

* 국내 반입 목표: ('21) 61만톤(전체 곡물 수입의 3.5%) → ('27) 300(18%)

1-1. 식량자급률 제고

가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 '27년까지 전체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 달성

* 식량자급률(%): ('21) 44.4 → ('27) 55.5, 곡물자급률(%): ('21) 20.9 → ('27) 27.0

-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자급률을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 밀·콩 등 기초 식량작물 중심 국내 생산 확대
 - 육류, 채소·과실류 등은 수급 및 가격안정 중심으로 관리하되 장기적으로 일정한 자급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 농지 관리 체계화, 농업인력 확보, 논·밭 기반정비(SOC) 등 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생산요소 확충

< '27년 자급률 목표치(안)>

(단위: %)

품 목	자급률 실적			'27년 목표치
	'19년	'20년	'21년	
식량자급률 (식용곡물)	49.3	49.3	44.4	55.5
곡물자급률 (사료용 포함)	23.3	22.4	20.9	27.0
열량(칼로리) 자급률	34.7	33.9	32.0	50.0
쌀	92.1	92.9	84.6	98.0
보 리	47.7 / 46.1	38.2 / 36.5	33.3 / 31.3	34.6 / 33.1
밀	0.7 / 0.5	0.8 / 0.5	1.1 / 0.7	8.0 / 5.0
콩	26.7 / 6.6	30.4 / 7.5	23.7 / 5.9	43.5 / 11.6
옥수수	3.5 / 0.7	3.6 / 0.7	4.2 / 0.8	8.2 / 1.7
서 류	104.3 / 94.4	104.5 / 94.5	104.0 / 94.2	109.5 / 102.5
축산물(육류)	66.4	69.6	68.6	66.5
- 쇠고기	36.5	37.2	36.8	37.1
- 돼지고기	69.7	78.1	76.7	72.6
- 닭고기	82.0	82.3	83.5	82.4
우유 및 유제품	48.5	48.1	45.7	47.7
계란	99.5	99.4	94.8	98.6
사료	37.1	36.1	36.4	38.2
- 배합사료	27.4	25.1	24.9	24.2
- 조사료	79.9	82.1	82.7	84.6
채소류	90.3	89.9	91.1	89.6
과실류	75.5	74.4	75.4	75.3

* 서류 생체중(수분 포함 중량) 기준 // ** 보리·밀·콩·옥수수·서류 등은 식량자급률/곡물자급률 순

*** 단 사료용 쌀 소비는 시장 수급보다는 정부 재고미 방출에 의한 것이므로 쌀은 곡물자급률을 산정하지 않음

나

식량작물 생산·소비 체계 전환

◆ 쌀 중심 생산을 밀, 콩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의 집중 생산체계로 전환

* 가루쌀(천톤): ('22) 0.4 → ('26) 200, 밀/콩(천톤): ('22p) 34/111 → ('27) 168/147

□ 쌀 적정 생산 및 가루쌀 생산·소비 확대

- '가루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책 수단을 통해 쌀 적정 생산 유도
- 가루쌀 생산 확대를 통해 수입밀 일부 대체('27년까지 연 20만톤)
 - 가루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 표준 재배법 보완 및 가루쌀을 가공하는 업체에 공공비축 가루쌀 공급
- * 가루쌀 재배면적(ha): ('23) 2천 → ('26) 42
- 가루쌀 新수요 창출을 위한 제품개발·마케팅 등 활성화 지원('23. 신규) 및 글루텐프리 등 쌀 가공식품 인증 활성화('22: 최초 인증 → '27: 50개)
- * 쌀 가공식품 수출액(백만불): ('21) 164 → ('23) 198 → ('25) 238 → ('27) 300

□ 국산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안정적 생산·소비 기반 마련

- 전문 생산단지 조성, 건조·저장 시설 확충 및 정부 보급종 공급 확대
 - * 전문 생산단지(천ha): ('22) 7 → ('27) 21, 건조·저장 시설(개소): ('22) 4 → ('27) 14
 - * 보급종 확대 계획(톤): ('21) 1,334 → ('22) 2,155 → ('23) 2,320
- 제빵·제과 협력사업 발굴, 소비 활성화 캠페인 추진, 대량 수요처와 계약재배 확대('22: 6천톤 → '25: 12) 및 제분·유통비용 지원

□ 국산 콩 생산·소비기반 구축

- 전문 생산단지 조성 확대 및 배수시설 정비, 논콩 재배기술 컨설팅
 - * 콩 전문 생산단지(개수): ('23) 170 → ('25) 200 → ('27) 220
- 계약재배 확대 및 정부 매입 콩 할인공급을 통한 신규 수요처 발굴
 - * 두류 계약재배(천톤): ('22) 20 → ('25) 30

다

농지 관리 체계화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해 농지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 농지면적 감소 추세 목표(%): ('17~'21) 연평균 $\Delta 1.2 \rightarrow$ ('21~'27) 연평균 $\Delta 0.5$

* 수리안전답률 제고(%): ('21) 63.7 $\rightarrow$ ('27) 66.5

□ 농업진흥지역 중심으로 농지관리 체계화

- 정부는 농지 관리목표가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기본·실천계획 수립(법적근거 마련, '23)
- 전국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대장 일제 정비(~'24)
- 농업진흥지역 DB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23)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 허가권한 위임 범위 조정, 농지전용협의 시 심사기준 마련 등

□ 재해 대비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SOC 체계 개편

- 저수지에 수위·누수 계측기 설치하는 등 IC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농업용수관리 디지털화>



- 기후변화 대비 수로의 3차원 디지털화(~'24), 수리시설 원격제어(~'25), 물계측 장치 확대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물사용 효율성 제고
- 벼 이외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용수공급·배수개선 등 농업SOC를 정비하고 밭작물 재배 유도를 위해 「농경지 침수위험지도」 제작(~'27)

□ 간척지의 대규모 생산기반 구축 및 다각적 활용 촉진

-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첨단농업 전초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단지별 활용계획을 수립('25)하고 단계적 영농 추진('26~)
- 간척지 다각적 활용 촉진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계획」 수립('24)

1-2. 국내 비축 및 해외곡물 유통망 안정적 확보

◆ 비상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식량작물의 공공 비축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유통망 확보 지원

* 국산 밀·콩 비축 매입량(밀/콩, 천톤): ('23) 20/25 → ('25) 30/45 → ('27) 50/55

* 해외 유통망 확보 목표(개소): ('22) 2 → ('27) 5

□ 식량 위기 대응력 제고를 위해 식량작물의 공공 비축 확대

- 쌀은 정부양곡 관리·운영을 통해 적정 재고를 상시 확보
- 밀의 정부 비축물량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정부 비축시설* 신규 설치 검토('24~)
- * 밀 생산 확대 대응을 위한 밀 전용 비축시설('23: 예비타당성 조사)
- 콩의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실제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입가격 결정

□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및 비상시 대응력 제고

- 곡물 엘리베이터 등 해외곡물 유통망 확보를 위한 저리융자('23, 신규) 및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식품 펀드* 신규 조성 검토('24~)
- *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펀드 조성 가능 여부 검토(~'23)
- 안정적인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식량 확보를 위한 밸류체인(value-chain) 쉼 과정에 대한 지원기반 구축(수출입은행* 협조)
- * 「글로벌 공급망 대응 프로그램」 신설('22~) 및 해외 곡물터미널 지분 투자시 자금 지원 등



<국내 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보>

- ▶ 곡물을 건조·저장·분류·운송하는 유통시설을 의미하며, 주로 곡물 주산지 또는 강·항만·철도 등 운송시설 인근에 위치
- ▶ 포스코 우크라이나 곡물터미널 확보('19), 팬오션 미국 EGT 곡물터미널 확보('20)

- 수입국 작황 부진, 수출제한조치 등에 대비하여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 지원방안 마련('24~)

【지원 예시】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현지 사전조사, 운송비 차액 및 국내 도입시 보관·저장, 국내 가공 적합성 평가·제품개발 R&D 등 지원방안 도입 검토

【지원 사례(산업부)】 미주·유럽 등 중동 이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는 경우 운송비 일부 지원(석유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수입부과금 환급)

-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손실 보상 장치 마련(해외농업산립법 개정, '23)

* (현행) 비상시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근거 규정 미비 → (개정) 사업자 손실보상 근거 규정 신설

□ 식량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국제 농업협력 강화

- 민간 주도로 현지에 생산-유통-국내반입 기반을 구축하는 패키지사업 추진

* 대상 국가 선정 및 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3~)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의 범위를 밀 등 다른 곡물까지 확대하여 회원국간 약정물량을 비축하고 비상시 활용하는 방안 논의 추진('23~)

* 아세안+3 국가 간에 쌀 비축물량을 사전에 약정·비축하는 국제 공공비축제도

□ 해외농업 자원 개발 지원 강화 및 진출지역·품목 다변화

- 해외농업 진출 기업의 농지확보, 시설투자 융자금 확대 및 진출지역 사전 조사, 컨설팅, 정보 제공 등 지원 강화

- 핵심품목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우선 지원하고 특정국의 농산물 수출 제한 조치 등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진출지역 다변화*

* (기존) 연해주, 동남아 위주 진출 → (확대) 미주, CIS, 오세아니아

- 기존 해외농업 개발 자원이 농산물·축산물로 제한되어 있어 가공품·식품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추진('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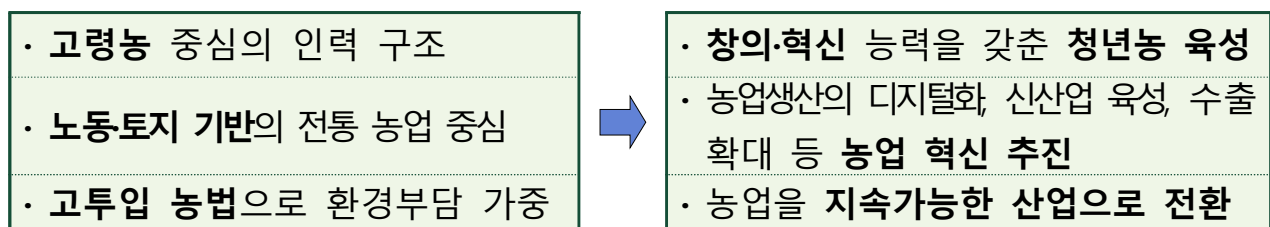
* (기존) 생산·경작 위주(콩) → (확대) 가공·정제 등 밸류체인 진출(식용유, 대두박 등)

2. 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 정책 여건

- 농가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농업 혁신의 장애요인
 - * 40세 미만/ 65세이상 경영주 비중: ('90) 14.6%/18.3% → ('20) 1.2/55.9
- ICT·AI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
 - * 스마트농업 시장규모('21): 세계 407억불/국내 0.9조원, 그린바이오('20): 1조 2천억불/5.4조원, 푸드테크('20): 5,542억불/61조원
- 탄소중립 논의 가속화*에 따른 환경친화농업으로의 전환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성장**에 따른 새로운 수요 변화 대응 필요
 - * 국내 메탄(28백만톤)의 약 44%(12.2)를 배출하는 농축수산에서 '18년 대비 30% 감축 목표('30)
 - ** 반려동물 관련 산업 규모 전망(KREI, '21): ('22) 3.2조원 → ('25) 4.1 → ('30) 5.2

□ 2023~2027 정책 추진 방향



- 농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할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및 지원 강화
 - * '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청년농 3만명 육성
- 미래 적합형 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스마트농업 확산, 저탄소 구조 전환 등 농업환경 관리 강화로 지속가능성 제고
 - * 스마트농업 보급률: ('22) 온실 12.8%, 축사 19.8% → ('27) 농업 생산(농가·면적)의 30%
-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푸드테크·그린바이오·반려동물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K-Food⁺ 수출 230억불 달성
 - * 국내 그린(농식품)바이오 산업 규모: ('20) 5.4조원 → ('27) 10
 - *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22) 2개 → ('27) 30

2-1.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육성을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27년까지 창의적·혁신적 마인드를 갖춘 청년농 3만명 육성

□ 청년농의 유입통로를 확대하고, 창업·정착기반 종합 지원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지급단가 인상** 및 지원요건·의무사항 완화 등 진입 유인 마련

* ('22) 2천명 → ('23) 4

** ('22) 월 최대 100만원 → ('23) 월 최대 110

○ 자본이 부족한 청년농의 수요에 맞는 농지 공급체계 구축

-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 범위를 확대*하고, 매입 단가 인상('22: 388백만원/ha → '23: 408)

* ①간척지, ②비농업인 소유 '96년 이전 취득농지, ③5년 이상 임대수탁농지 등

- 청년농이 선호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업 스타트업단지, 선임대-후매도 등 신규 도입('23)

○ 상환·담보력이 미흡한 청년농 대상 융자 지원 강화

- 후계농자금,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등 주요 융자자금의 상환 기간 연장(15년 → 25),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추진('23)

* 후계농자금 금리 인하: 2% → 1.5

** 후계농자금 한도 상향: 3억원 → 5

-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농 대상 농신보 보증 확대 등 제도 개선

* 생애최초 농지 취득 자부담분, 임대농지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보증 제공



<청년농 성공사례 : 경기 포천 딸기 ○○팜 대표>

▶ 대기업 AI 연구원 경력

▶ '19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및 후계농업경영인 자금 지원대상 선정

▶ 총 6인 규모 영농회사법인 '포천딸기○○팜' 설립('20~)

▶ 6,600㎡ 규모 딸기 스마트팜 운영, 연 수익 1억 5천만 원('21)

□ 예비농업인의 창업 성공을 위한 사전 보육 강화

○ 농고·농대생의 실전형 창업 교육 강화

- 「영농창업특성화대학」 확대 추진('23: 5개교 → '27: 7) 및 「농고-농대생 영농창업 원팀 프로젝트」* 시범 운영('23: 시범운영, '25~: 확대)

* 미래농고 3~5명과 특성화대학 2명이 팀을 이뤄 창업 아이디어 발굴, 영농창업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 실전형 프로젝트 운영(4~6개월, 23년 10개팀 시범운영)

- 한농대 새만금 스마트농업 실습장 공동 이용 등 학생 간 연계 교육 강화

○ 비농업계 인재의 영농 기술·경험 축적 기회 제공

- 권역별(9개) 마이스터대학, 농업기술센터 등 시·도, 시·군별 농업 교육기관을 활용한 품목별 농업 교육 강화
- 한농대 '청년농 아카데미' 교육 대상을 일반인까지 확대('23)

□ 은퇴 농가의 이양 농지를 청년농에게 제공

○ 고령농이 은퇴 후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시 직불금을 지급하고 청년농에게 해당 농지 우선 지원('24~, 경영이양직불 개편)

*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기대수익(농업 순수익, 농업보조금)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 설정

□ 청년농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상시 보육 지원체계 강화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소규모 국공립 돌봄 시설) 및 「농번기 아이돌봄방**」 확충을 통한 농촌형 돌봄 인프라 구축 추진

* ('22) 98개소 → ('27) 123

** ('22) 71개소 → ('27) 160

<농번기 아이돌봄방: 함안>



○ 육아도우미, 온라인 학습콘텐츠, 어린이집 차량 환승 스테이션* 등을 포함한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 도입방안」 마련('23)

* 장거리 읍·면과 어린이집 간 중간 정류장(환승스테이션)을 두어 부모 차량 또는 지자체 버스를 타고 온 아동이 어린이집 차량으로 환승하도록 지원하는 '차량 환승장 모델'

2-2. 미래에 적합한 농업으로 전환

가 스마트농업 확산

◆ 스마트농업을 육성하여 농업 생산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혁신성장

* 스마트농업 보급률(%): ('22) 온실 12.8, 축사 19.8 → ('27) 농업 생산(농가면적)의 30

- 스마트농업 확산을 주도하는 농업인·기업·전문가 혁신역량 제고
 - 청년농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23: 신규3), 보육센터 교육개편('23~) 등을 통해 청년 창업 기반 마련
 - * 농지공급, 전문교육, 자금지원 등을 통해 약 3천명의 스마트농업 창업 청년농 육성(~'27)
 - 기술·장비·서비스 보급과 데이터 수집을 지원하는 「기업 주도 + 농업인 참여」 현장 실증 프로그램 확대('27년까지 1,000개 서비스)
 -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지도·상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제도 신설('24~)
- 기후영향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온실 전환 촉진
 - 기존 주산지 온실에 디지털장비를 보급하여 스마트온실로 전환하고 대규모 단지 육성을 위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24~)
 - * 육성지구 지정 시 입주경영체에 장기임대, 임대료 경감, 수익계약 등 특례 제공
 - 수직형 스마트팜(스마트작물재배사) 농업진흥 구역 내 설치 허용('23)
 - *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 추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등
- 민간참여 기반의 간척지 「대규모 첨단온실」 조성 추진('27까지 100ha)

<수직형 스마트팜>



▶ (스마트농업 전문기업) 온실구축 및 장비·서비스 제공, (농업경영체) 농산물 생산 (유통기업) 가공·수출, (정부) 규제개선, 기반 조성, 민-관 협의체 운영

- 생산성 향상 및 악취, 질병 등 문제 해소를 위한 스마트축산 확산
 - 농가에 축사 환경관리 및 가축 사양관리가 가능한 ICT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팜 기반 확대('21: 4.7천호 → '23: 6.9 → '27: 11)
 - 악취·질병 등 문제가 발생하는 주거지 인접 축사는 ICT 축산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하고, 시설개선·스마트 축사 설비 구축 지원('23~)
- 노지농업 디지털화를 위한 지능형 농기계 보급 확대
 - 노지 자율주행 이앙기·트랙터·콤바인 등 첨단농기계 실증과 상용화 촉진을 위한 시범단지 조성(~'25, 6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한 자율주행농기계 시범보급('24~)
- 스마트농업 핵심기술 국산화 연구·개발 확대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스마트팜(온실·축사)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27) R&D 추진
 - 표준화된 농업데이터의 수집·관리와 AI 서비스 개발·확산을 지원하는 「개방형 스마트농업 데이터·AI 플랫폼」 구축('23)
 - 「스마트농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23)
 - * 규제 완화(지구 지정 등),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플랫폼 등
- 중동·동남아·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스마트팜·농기자재 수출 확대
 - 국가별 기후·환경에 특화된 데모 온실 구축(~'27, 6개소), 기자재·전문인력 패키지 진출 거점으로 활용



<베트남 데모온실(멜론, 고추, 토마토, 딸기 등 재배)>

- 「스마트팜 수출지원단」을 통해 수출유망국 시장정보 제공, 현지 바이어 연계, 수출과제 발굴 등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23: 60건)

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구축

◆ 농업·농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식품 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고, 체계적 관리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증진

* 농축산분야 '18년 배출량(22.2백만톤) 기준 '30년까지 22.5% 감축(17.2백만톤 배출) 목표

□ 생산 및 유통·소비 단계까지 푸드시스템 전반 탄소 감축 추진

○ 농자재 투입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저탄소 농업 확산

- 저탄소 농법(논물관리 등)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노동력 투입 등) 보전분 등 지원을 위한 「**가칭탄소중립 프로그램**」 도입('26~)

* '24~'25년 현장수용성 검증 등 시범사업을 거쳐 '26년 본 사업 추진

- 디지털·그린바이오기술을 활용하여 생산성은 유지·향상하면서 온실가스 발생량 및 투입재 사용량을 감축 추진('23~)

* 농약·비료 저감형 스마트농업 기술, 화학농약·비료 대체 생물농약·비료 개발 등

○ 저탄소 사육관리,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통한 축산 분야 탄소 배출 감축

- 국산 소 사료 메탄저감제 개발(~25) 및 적정 단백질 공급을 통한 메탄·질소 저감
- 민간기업·공공기관 주도 가축분뇨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단지 조성 및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시설 구축(~'27: 5개소)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발전 폐열을 시설온실에 제공
- ▶ 온실농가의 난방·온수비용 **연간 1억원 대체**
- ▶ 화석연료 대체로 온실가스 저감, 고온작물 재배(멜론 등)로 수익 향상 효과

○ 식품손실 저감, 유통거리 축소,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해 농식품 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추진

▶ **Food System:** 식품의 생산·가공·운송·소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의 집합체(UN), UN·OECD는 푸드시스템 전환을 통한 탄소 감축 강조

□ 재생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탄소 감축

-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한 영농형태양광 도입 검토
 - 실증결과를 토대로 농촌공간계획법상 재생에너지지구와 연계하여 검토
 - 농업기반시설 및 유희부지 등 활용한 재생에너지 지속 보급
- 농촌지역 에너지 효율화 추진계획 마련('23)
 - 시설농업·유통시설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및 에너지 최적사용 체계 구축
 - 전기·수소용 농기계 연구개발 확대,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지원

□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분야 적응·회복능력(resilience) 향상

- 기후변화 관련 컨트롤타워인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26)
 - 시·군별 기상변화 대응, 기후변화 데이터 수집·가공·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역할 수행('26~)

▶ (미국 사례 - Climate Hub) 지역별 기후변화 관련 정보제공 및 기술개발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기후관련 의사결정 지원

- 기후변화 예측·모니터링 기술개발 및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체계 강화를 통한 농가 피해 예방·저감

* 재배적지 예측: ('21) 11종 → ('27) 21, 조기경보서비스: ('21) 40시·군 → ('27) 155

□ 온실가스 감축·전환·기후적응을 위한 추진 기반 구축

- 농업분야 온실가스 발생·감축 증빙을 위한 통계 및 온실가스 산정 방법 고도화 등 인벤토리 개선('23~)
- 정책효과 점검을 위해 생물다양성,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 지표 및 측정 방법을 개발·보완하고('23~) 모니터링 체계 구축('25)
- 농업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농식품부 내 전담기구* 설치 검토(~'26)

* EU·美·日 등 벤치마킹을 통해 일관성 있는 농업환경 정책 추진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등

다

R&D 혁신 및 기술창업 활성화

◆ 농식품 분야 R&D 투자를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벤처창업 지원

- * 농식품 분야 R&D 투자 확대: ('22) 0.9조 원 → ('27) 1.2
- * 데이터 기반 유망 벤처 기업: ('21) 누적 58개 → ('27) 150

□ 민간의 기술 혁신과 성과 창출을 도울 R&D 추진체계 개편

- 차폐실험실 등 국가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확대 (~'25, 4개소) 및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24) 추진
- 투자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농식품 R&D 혁신방안」 마련('23)

<개편 추진 방향(안)>

- ▶ 농림식품 R&D 거버넌스 체계 개편을 통해 현장 소통 및 성과 창출 확대
- ▶ 유망·핵심기술 R&D를 집중 추진하여 기술스케일업 및 글로벌 농산업 경쟁력 제고
- ▶ 미래 신성장분야 발굴 및 대형 연구사업 수행을 통한 중장기 대응역량 강화

□ 첨단기술 분야 벤처기업의 창업·성장을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 초기 창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벤처기업에게 기술 가치 평가 수수료와 투·융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기술금융 활성화
- 초기 소액자금 조달 및 소비자 수요 파악을 위한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수수료 및 컨설팅 지원
-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유망 벤처의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강화('24~)
 - * ①첨단분야 우선지원, ②시장성·상용화 가능성 평가를 통한 후속지원 강화('23~)
- 농식품 벤처 액셀러레이터*를 육성하여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연 4개社)
 - * 유망 벤처를 발굴하여 투자 컨설팅 등 종합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

라

전략적 국제협력 농정 추진

◆ 한국 농업의 강점을 활용한 전략적인 ODA로 국가 위상을 높이고, IPEF 등 신통상질서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극대화

□ 브랜드화된 농업 ODA 사업 추진으로 한국의 위상 제고

- 아프리카 7개국*에 다수확 벼 종자 보급, 생산단지 구축, 수확 후 가공·유통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구축(~'27)

* 가나, 감비아, 기니, 세네갈, 우간다, 카메룬, 케냐 등 쌀 자급률 저조 국가

- 중동, 동남아 등 지역별 수요에 기반하여 스마트팜, 디지털농업행정 등 첨단 농업기술 ODA 확대, 선진 기술 국가 이미지 확산

* 한국 ODA 사업을 「K-스마트팜」, 「K-디지털농업」 등으로 브랜드화하여 홍보

- 국제기구(WFP)를 통한 쌀 식량원조 규모를 점진 확대하여 식량위기 극복에 선도적 역할 강화

□ 농업 ODA 기관 간 연계 및 기업 참여 확대를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

- 「글로벌농림협력협의회」 등 농업 ODA 유관기관·기업 간 협의체를 활성화, 각 기관·민간 역량을 결집한 대규모 농업 ODA 발굴('23~)

- 기업과 협력하여 아프리카·동남아 등에 중고 농기계 지원 및 수리·임대센터 ODA 추진, 농기계 수출 및 해외거점 마련('24~)

* '24년 시범사업(세네갈) 실시 후 인근 국가, 동남아시아로 확산 및 규모화 추진

□ IPEF(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신통상질서 분석 및 선제적 대응

-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로운 통상 이슈 포함 농업인단체, 관계기관 등과의 소통을 통해 농식품 분야 부담 최소화 노력

- 식량 공급망 안정, 수출 기회 확대 관련 논의에 적극 대응

2-3.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으로 농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조원): ('20) 5.4 → ('27) 10

□ 그린바이오 기업지원, 거점 육성 등 산업화 촉진

- 그린바이오 전용 펀드 추가 결성(매년 200억원 목표), 특화 엑셀러레이터 선정('23: 1개社) 및 대·중견-벤처 연계 제품화 지원 추진('25~)
- 기업의 제품 평가·실증 등 상품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6대 분야 거점(가칭, 그린바이오 허브) 육성

①종자(김제, K-Seed valley), ②미생물(정읍,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③동물용의약품(포항, 그린백신실증센터), ④곤충(예천, 곤충양잠단지), ⑤천연물('23년 공모예정), ⑥식품(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 주요 소재의 원료작물 대량 공급을 위한 첨단농장 구축 및 농식품 바이오파운드리(Biofoundry)* 구축(~'28)

* 디지털, AI, 로봇 등 ICT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 분야 연구 과정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하는 시설로 연구개발 기간 단축 및 제조공정 혁신 가속화

▶ (첨단농장 - 일본 어드벤스드어그리社) 수직형농장에서 스트레스 재배기술을 통해 피니틀 성분(당 조절 기능)이 집적된 식물(아이스플랜트) 생산 및 제품화(건강기능식품)

▶ (바이오파운드리-CJ) 바이오 소재 개발을 위해 미생물 균주 탐색과 생산공정을 자동화한 국내 최초 바이오 파운드리 시설 구축

- 민간 수요 창출을 위해 그린바이오 소재 사용과 주요 ESG 지표와의 연계 검토('23) 및 기업 맞춤형 수출 지원* 추진

* 해외인증 취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가별 시장동향, 제도 등 정보제공('24~)

□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

- 12대 핵심기술* 관련 단기 프로젝트형 R&D를 확대하고,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로드맵을 마련('23)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 마이크로바이옴,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대체식품·메디푸드, 바이오사료, 바이오 농약·비료, 동물용 바이오의약품 등



<사례: 세계 최초 식물기반의 돼지열병 백신(허바백™/바이오애플)>

- ▶ 밀폐형 식물공장, 식물세포배양 등 생산시설, 동물효능평가 지원
- ▶ 원천기술 기반의 그린백신 품목허가 및 제품화
- ▶ 캐나다 수출 계약 체결('21.10.)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24), 특수 대학원(~'25) 운영 및 바이오데이터 활용 코디네이터 육성

-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제품개발, 마케팅, 연구시설 등 종합 지원

- 대학 창업지원센터, 연구기관 간 연계 강화

* ('21) 익산 → ('22) 포항, 평창 → ('23) 1개소 추가 선정

<익산 벤처캠퍼스>



□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전환 및 제도 마련

-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의 데이터 표준화, 분석기간 단축('23) 및 생명자원정보서비스(BRIS)의 국내외 데이터 연계 강화

-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검토('24) 및 탄소 배출권 관련 인센티브 방안 검토('24) 등 수요 견인

- 제도·규제에 대한 건의, 관련 문제 해결 등 소통을 위한 플랫폼인 「(가칭)그린바이오 협의회」 구축('23)

-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유관기관(농기평, aT, KREI 등)의 기능을 강화·조정하여 그린바이오 산업 공공 플랫폼의 기능 활성화

나

푸드테크 산업 육성

◆ 식품산업에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 도모

*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22) 2개 → ('27) 30

□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및 해외 진출 확대

- '2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벤처창업자금(최대 280백만원), 원료매입·시설자금 등 우선 지원

* 조성목표(억원): ('23) 100 → ('25) 200 → ('27) 250

-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푸드테크 투자로드쇼(연 1회) 개최, 투자정보 플랫폼 구축('23) 등 추진

- 혁신 기술의 빠른 사업화 지원 및 초기 비용 절감을 위해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및 「식품정보플랫폼」 구축 추진('23~'27)

* 푸드테크 기업 누구나 소재 개발부터 제품테스트까지 할 수 있는 공동 시설·장비 플랫폼

-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미국·EU 등 푸드테크 시장 정보 제공, 해외인증 취득, 현지 통관·검역·라벨링 등 추진('23~)

□ 푸드테크 및 전통식품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개발·보급

-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를 선정('23)하여 민간 중심 R&D 강화

▶ **10대 핵심기술** ①세포배양식품 ②식물기반식품 ③간편식 ④식품프린팅 ⑤식품 스마트 제조 ⑥식품 스마트 유통 ⑦식품 커스터마이징 ⑧외식 푸드테크 ⑨식품 업사이클링 ⑩친환경 포장

-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스마트 제조·유통, 프린팅 등 기술 분야는 「K-푸드테크 이니셔티브」로 추진

* (기간) '25~'32, (참여기관) 농식품부·과기부·산업부·농진청 등

- 김치*, 전통장류** 등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개발

* 공정별 ICT 기술을 접목한 김치 지능형 공장 모델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27)

** 전통장류 지역별·공정별 유용 발효미생물 발굴 및 DB화('23~), 기능성 규명 등

< 푸드테크 활용 사례: LG전자 클로이 셰프봇 >

- ▶ LG전자는 '20년 CES에서 로봇을 활용한 레스토랑 운영·관리 프로그램인 'LG 클로이 다이닝 솔루션' 공개
 - 接客,주문,조리,서빙,설거지 등 로봇의 다양한 서비스 영역 제안
- ▶ 이 중 '클로이 셰프봇'은 조리로봇으로 고객이 재료를 그릇에 담으면 로봇이 조리하여 국수를 완성



□ 융합형 인재 양성, 안정적 원료 공급 등 푸드테크 인프라 조성

- 주요 대학에 식품과 AI·로봇기술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 신설('24~) 및 푸드테크 계약학과* 확대

* (현재) 농식품부와 4개 대학이 협약 체결·운영 → (~'27) 12개 대학

- 푸드테크 관련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대두, 쌀 등 주요 원료·소재 정보를 DB화하고 농가-기업 간 계약재배 체결 유도

* (DB구축) 대체식품 원료·소재 특성 및 품질평가 방법 등 → (~'25) 30종 확보, 공개

□ 푸드테크 및 미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식물성 대체식품 표시·안전 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 추진('23~, 식약처 협조)

* 푸드테크 산업 정의, 기술 인증, 실태조사, 연구개발 등 사업지원 근거 등

- 푸드테크 기술 인증제도를 도입*('24~)하고 인증 기술은 각종 정책 사업에서 우대 지원

* 관련 근거, 인증 기준 및 절차, 심사기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푸드테크 법률에 포함

- 푸드테크,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기술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식품 산업 전환 방향이 담긴 「제4차('23~'27)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 마련('23)

(주요내용) ①식품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②K-Food 글로벌경쟁력 강화, ③전통 식품의 수출산업화, ④식품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강화, ⑤ 식품기업의 경영안정 강화

다

K-Food⁺ 수출 확대

- ◆ K-Food⁺ 수출을 통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쏠분야 혁신동력을 창출하고, 검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 K-Food⁺(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목표(억불): ('22) 118 → ('23) 135 → ('27) 230

□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구성·운영(본부장: 농식품부 장관)

- 주요 수출기업(식품, 스마트팜, 농기계, 종자 등), 지자체, 유관기관(aT, KREI, 농진청 등), 단체(농기계협회, 종자협회 등) 등으로 구성('23)



- 농식품과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 지속적 수출동력 창출

□ 수출물류비 보조 폐지('24~) 대응을 위해 수출조직·유통망 혁신

- 수출통합조직*, 수출협의회 등 품목별 수출전문조직을 확대하고 자생력을 높여 민간(생산자·수출업체 등) 주도 수출기반 강화

* ('22) 딸기, 파프리카, 버섯, 포도, 배, 감귤, 키위 등 10개 → ('23) 사과, 배추 추가

-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 신제품 육성체계 확립 등에 R&D 집중 투자

- 유통비용 절감, 농산물 맞춤형 물류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공동포워딩* 등 물류협력체계 구축

* 공동포워딩: 개별 수출업체가 아닌 단일한 조직이 전체 수출물량 대상으로 운송사와 운임 등을 협상하고, 공동으로 화물의 포장·적재·보관·운송·통관 등을 조정하는 방식

- 해외 판매지까지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확대 추진

* 공동물류/콜드체인 지원국(개국): ('22) 18/3 → ('27) 23/10

□ K-culture 연계 강화 및 한식이 주도하는 K-Food 수출 확대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뉴욕·파리·도쿄 등 지정 확대, '23: 20개 → '27: 80)
- 수출 전략 품목별로 한식 메뉴와 스타셰프 매칭('23)
- 글로벌 미식 트렌드 주도를 위한 '한식 글로벌 브랜딩' 전략 수립('23)

<아토믹스(Atomix), 뉴욕 한식당>



'22 World's 50 Best 33위(미국 1위)

□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 분야별 맞춤 수출전략 추진

- 주요 수출 유망국에 스마트팜 시범온실을 조성하여 스마트팜 수출 거점화하고, 국가간·타산업간 협력체계 구축
- 지능형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새만금, '23~'26)을 통해 수출 농기계의 품질을 제고하고, 국제 박람회에 기업 참가 지원을 통한 판촉 강화
- 동물용의약품 해외전시회 기업 참가를 지원하고, 선진국 GMP* 수준에 부합하는 수출 제품 생산토록 컨설팅 강화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는 관리기준

- 해외농업기반시설 수주 가능성이 있는 전략국가(12개)를 타겟팅, 현지 진출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계·감리 등 수주 확대

* 아시아(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아프리카(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중남미 등

□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한 국제 협상으로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시장개방과 규범 수준이 높은 메가 FTA 참여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수출 확대를 고려한 협상전략 수립
- 농식품 수출 검역장벽 극복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확대 견인
- 수출 유망 품목의 검역 장벽 유형별 분석 및 맞춤형 검역 협상

(유형①) 정보 부족 → 네트워킹으로 상대국 정보수집 강화, (유형②) 상대국 지연 → 원인 파악 후 적극 대응방안 마련, (유형③) 검역조건 이행 곤란 → 검역조건 완화 요청 등

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제도 정비

◆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 분야별 성장 기반 확충

* 반려동물 영업 허가제 대상 업종: ('23) 4(수입·판매·장묘·생산업) → ('24) 5(전시업)

【연관산업 육성】

□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인력 양성

-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체계 마련 및 표시기준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개선('23) 및 수출 지원 강화

* 펫테크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지원체계 구축, 박람회 등 행사 개최

- 동물 장묘업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설치제한 규정 완화 및 이동식 화장서비스 시범 운영(2개소, ~'24)

- 반려동물 행동 분석·훈련과 반려인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24)

□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개선 요구에 대응하여 동물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 동물병원 의료품질 개선을 위한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마련('23)

-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편차 완화를 위해 동물 진료비 게시 및 사전 고시제도 시행('23)

□ 반려동물 맞춤형 먹거리·의약품·의료 기술개발 R&D 추진

* 반려동물 전주기 산업화 기술개발(R&D) 사업('22~'26)

기능성 펫푸드	맞춤형 의약품·의료기술	반려동물 헬스케어
▶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처 방식, 기호성 사료첨가제, 곤충원료 활용 기능성 사료 등	▶ 피부질환 치료제, 면역세포 치료제, 지속형 항생제, 갑상샘 질환 치료제, 혈액 대체제, 인공보혈물 재료, 뇌질환 진단키트 등	▶ 반려동물 맞춤형 헬스 케어 서비스 및 플랫폼, 개체식별기술

【동물복지 강화】

□ 학대, 유기 및 개물림사고 등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 확대

○ 반려동물 양육자 돌봄 의무* 강화 및 입양 전 교육** 확대

* 반려견을 기르는 곳에서 주인 없이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 짧은 목줄 금지 등('23)

** 입양예정자 대상 온라인 강의('22) → 산책·배변 등 펫티켓 현장실습 제공('23~)

○ 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명령 도입('23), 양형기준 마련(대법원 양형위원회 협의) 및 동물사육금지 등 제재 강화 검토(~'25)

▶ (독일) 동물사육금지명령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 등이 동물학대범죄의 반복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1~5년의 기간 내에서 사육금지(판결·약식명령)

○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 활성화 및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동물인수제 도입('23)

○ 개물림사고 예방을 위한 「기질평가제」 도입('24), 사고건의 맹견 지정, 맹견 수입신고·사육 허가제 도입 등 맹견 관리 강화('24)

□ 피학대·유기 동물의 구조·보호 및 입양 등 사후 조치 실질화

○ 피학대 동물 구조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격리기간 확대(최소 3일→5) 및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동물 학대 대응 매뉴얼」 배포('23)

○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및 유기견 입양 홍보·훈련 등을 위한 「전문입양센터」 신설('23: 2개소)

○ 민간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앞서 입지·시설 등 개선방안 마련('23) 및 기존 민간 시설에 대한 시설보완 등 환경 개선 지원('23~)

□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반려동물 번식·판매 등의 영업행위를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준수 사항 강화**

* 수입업·판매업·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23), 동물전시업 등 추가 전환 검토('24)

** (시설) CCTV 설치 장소 구체화 등, (영업기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신설 등('23)

- 반려동물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23) 및 단계적 고도화*를 통해 반려동물 이력 관리 기반 확충('24~)

* 신고제 도입 업종('23: 동물생산·수입·판매업) 확대, 동물등록제와 연계한 관리시스템 구축 등 검토

□ 농장·실험 동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동물복지 도축장·운송차량 지정기준(운송차량 등) 개선('23) 및 동물복지 축산방식*(인증대상 축종·시설 등) 단계적 확대 추진('25~)

* (현행) 축종: 산란계, 양돈, 육계, 한·육우, 젖소, 염소, 오리/ 시설: 농장, 도축장, 운송차량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개편*('24)을 통해 농가 지원 강화 및 동물 복지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인증 표시기준 마련, 인증 대상 축종 및 시설 확대, 소비자단체 협업 강화 등

- 미심의 실험에 대한 중지 요구 권한 부여, 변경심의 의무화 등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23)

□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 복지 요소 확대('24)

* (동물복지 요소) 돌봄의무 강화, 생산·판매 제한 등, (법체계) 맹견법 등 분법 검토

- 기존 「동물복지위원회」 기능 강화 등 거버넌스 개편('23~)

* (기존) 민간전문가 10인, → (개선) 농식품부차관·민간위원 공동위원장 20인, 정책 논의·조정 기능 강화, 전문가·관계부처 등을 포함한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

- 양육·돌봄 실태 등 동물복지 정기 실태조사* 및 통합정보체계** 구축

* '동물보호 국민인식조사'를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로 개편 및 조사방식 개선('23~)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구축, 반려동물영업·동물실험 등 정보 연계·통합('24)

- 동물보호단체와 교육·홍보, 동물학대 현장 지원 등 협업 강화('23~)

3.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 정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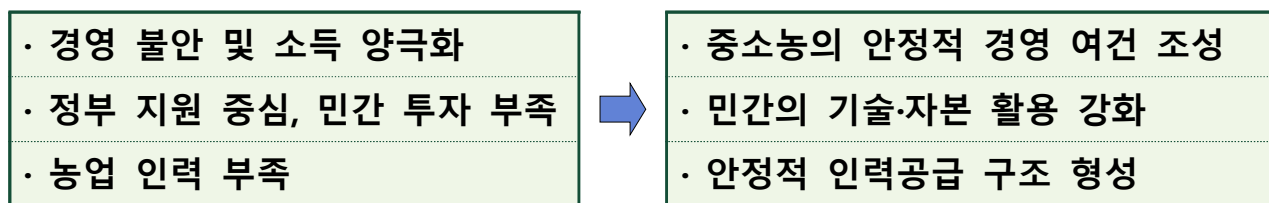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원자재 가격 및 전기·난방·연료비 급등, 금리상승 기조의 지속가능성 등 농가경영 리스크 상존

* 농업경영비(KREI, 천원): ('21) 24,229 → ('23) 24,945 → ('27) 25,176 → ('32) 27,095

- 중장기적으로 농업소득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글로벌 요인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은 농업소득 상승세 억제 전망

* 농업소득(KREI, 천원): ('21) 12,961 → ('23) 12,233 → ('27) 14,233 → ('32) 15,291

□ 2023~2027 정책 추진 방향



- 재해보험 확대, 직접지불제도 확대·개편, 농업 수입·소득 정보에 기반한 농정 추진 등 소득 안전망 확충

* 재해보험 대상품목: ('23) 70개 → ('25) 76 → ('27) 80

*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달성

- 비료·사료 등 생산비 부담 완화, 농작업안전재해 예방, 도시 조합의 도농교류 사업 활성화 등 농가 경영안정 도모

*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누계): ('22) 545개소 → ('27) 620

* 조사료 전문단지: ('22) 29천ha → ('27) 34

- 민간·시장의 기술·자본 활용을 강화하여 농식품산업 생산성 견인

* 농식품 펀드 민간 투자 확대(누계) : ('22) 15,000억원 → ('27) 25,000

-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이민제도와 연계한 외국인 농촌 정착 체계 구축 등 패러다임 전환 추진

*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고용허가/계절근로): ('23) 25/24천명 → ('27) 40/40

3-1.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가 농업 재해 피해 지원

◆ 재해보험 보장과 재해 피해 시 복구비용 및 금융 지원 강화

* 재해보험 가입농가(만호): ('22) 55 → ('27) 63(15%↑)

□ 대상 품목·지역 확대 및 재해보험 보장 강화

- 대상 품목*·지역 확대를 통한 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농작물 병충해 및 가축 질병 치료 보상 등 보장범위 확대

* 보험 대상품목(개): ('23) 70 → ('27) 80

- 높은 보장 수준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 운영 확대 추진

* 高보장수준(低자기부담비율) 상품 운영 품목(개): ('23) 27→ ('27) 37

□ 합리적 보상을 위해 손해평가의 공정성·정확성 제고

- 드론, 영상 등 스마트기술 활용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모바일 앱 활용 확대로 신속·정확한 평가체계 구축('23~)
-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제기 시 재조사 의무화하고, 이의신청 절차 신설('23~)

□ 재해대책 지원 확대 및 재해보험과 재해대책 보완 운영

- 실거래가 기준으로 재해대책 지원단가 상향 조정 추진 및 피해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이자감면·상환연기) 확대

* 금융지원 대상 정책자금 수(개): ('22) 4 → ('23~) 전체

- 재해보험금이 재해복구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복구비로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23)

나

농업 경영위험 대응

◆ 신뢰성 있는 농가 소득정보에 기반한 농정 추진체계 마련 및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강화

□ 농업 수입 변동 완화를 위한 소득정보 기반 농정 추진

- 소득정보 중심의 농정체계 구축 및 농업 경영 효율화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23~)
- 기본 직불제를 보완하여 다양화·심화 되는 농가 수입 변동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정보 기반 정책 도입 검토

□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정상화 지원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제도 개선('23~)을 통한 지원 강화
 - * 경영회생지원 농지 환매율(%): ('23) 90.5 → ('27) 92.5
 - 경영회생지원자금 지원한도 상한액 인상,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 연장 및 농가의 환매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강화
 - * 농산물 생산기술(농업기술센터), 세무상담(세무사), 환매전략(농지은행) 등

□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 * 농업인 안전사고율(농업인안전보험기준) 감소(%): ('23) 5.8 → ('27) 5.4
-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27) 및 안전관리 지침·기준 개발 확대
- 지역 단위 현장기술지원단*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별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 안전 리더 육성(~'27, 700명)
- * 작목별 위험요소 개선, 스마트기술 등 적용 사고·질병예방

3-2. 직접지불제도 개편

◆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 강화 및 공익기능 증진

* 국정과제에 따라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 농가 경영위험 완화 및 중소농 소득안정

○ 농가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 정보에 기반한 경영안정프로그램 도입

- 품목별 전국 평균수입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개별농가의 실제 수입(소득) 정보에 기반한 방식으로 점진적 전환

○ 최근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보전 효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직불제 개편 검토*

* 제2차('25~'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수립('24.下)

○ 고령농과 청년농 간 안정적 세대전환 뒷받침

- 은퇴희망 고령농의 농지가 청년농에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영이양직불 개편 검토*

*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여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에게 경영이양직불금 지급

- 영농정착지원을 통해 청년농 3만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선택직불제 확충

○ 밀·콩 자급률 제고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확대

○ 탄소배출 저감 및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선택직불제 확충

- 저탄소 영농 이행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는 탄소중립직불 도입

- 친환경농축산업의 집적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직불 개편

- 경관작물 재배 및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보전·관리 지원 확대

3-3. 농가 경영 여건 개선

가

농가 생산비 부담 완화

◆ 주요 농기자재 가격 안정 등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완화

*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원(개소, 누계): ('22) 545 → ('27) 620

* 조사료 전문단지(천ha): ('22) 29 → ('27) 34

□ 소농·고령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완화 및 비료 가격안정

- 농기계 구입자금(금리 2%)을 지속 지원하고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지원 확대를 통해 농기계 공동 이용 촉진
-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23), 원료구입자금, 할당관세 등 추진

□ 면세유 공급 및 부가세 영세율, 농약원제 할당관세 등 세제 혜택 지속 지원

- 트랙터·콤바인 등 농기계(42종) 대상 면세유 지속 공급 추진
- 농업인에 대하여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농약 제조업체에 대한 농약원제 할당관세 적용

□ 국내산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사료 구매지원 및 대체사료 개발 강화

- 전문단지, 유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거점 유통센터 구축 추진(~'27: 4개소)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 상향 조정 및 조사료 생산농가 소득보전 등('23~)

- 사료구매자금·세제 지원(할당관세 등) 확대 및 주요 곡물의 대체 원료 발굴*과 농식품 부산물 등 폐기되는 자원의 사료 원료화 확대('23~)

* 고가의 단백질 원료 대체를 위한 곤충 단백질 사료 자원화 등 원료 다변화 검토

농식품 분야 민간 투자 활성화

◆ 농식품 투자 확대 및 민간·시장의 기술·자본 활용 강화

* 농식품 펀드 조성 규모(억원, 누적) : ('22) 15,000 → ('27) 25,000

□ 농식품 분야 민간투자 제고를 위한 펀드 확대 및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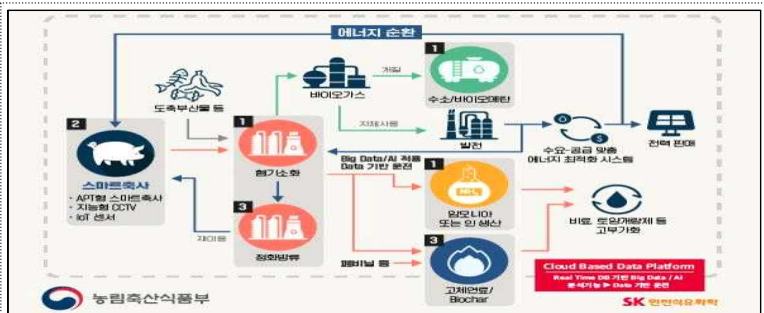
- 청년농, 스타트업 등 농식품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27년까지 정책 펀드 1조원 이상 추가 조성 추진('18~'22: 7,400억원 → '23~'27: 10,000)
 - 자금 유동화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를 '27년까지 1,500억원 이상 추가 결성 추진('18~'22: 720억원 → '23~'27: 1,500)
 -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펀드의 유동성 확보 방안 등 새로운 투자 방식 도입('23년 농식품투자조합법 개정)
- * 초기기업 등에 우선 투자하고 후속 투자 시 기업가치를 책정하여 지분율을 산정하되 선제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계약(초기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인 제고)
- 유망산업, 경영체 등에 대한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23)

☐ 기업과 농업의 상생협력 사례 창출 및 경영체 역량 강화

- 기업의 자본력·기술력을 활용한 성공사례 창출('23~)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기술협업(농식품부-SK인천석유화학)>

- ▶ 기업이 가진 ICT, IoT 스마트 제어기술, 약취 등 환경제어기술, 에너지 효율화 기술, 통합제어기술 등 기술협업
-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 IT기술을 활용한 통합 환경제어로 약취 저감, 축사폐수 정화처리 효율성 제고



- **농업법인 설립·운영 시 비농업계 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23)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3)
-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인센티브*** 확대('23)
 - *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 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연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기재부 협의)

다

농업인력의 안정적 공급

◆ 제도적 기반구축, 외국인력 장기취업 등을 통한 안정적 인력수급 및 농업인구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지원정책 마련

*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고용허가/계절근로, 천명): ('23) 25/24 → ('27) 40/40

□ 중장기 농업인력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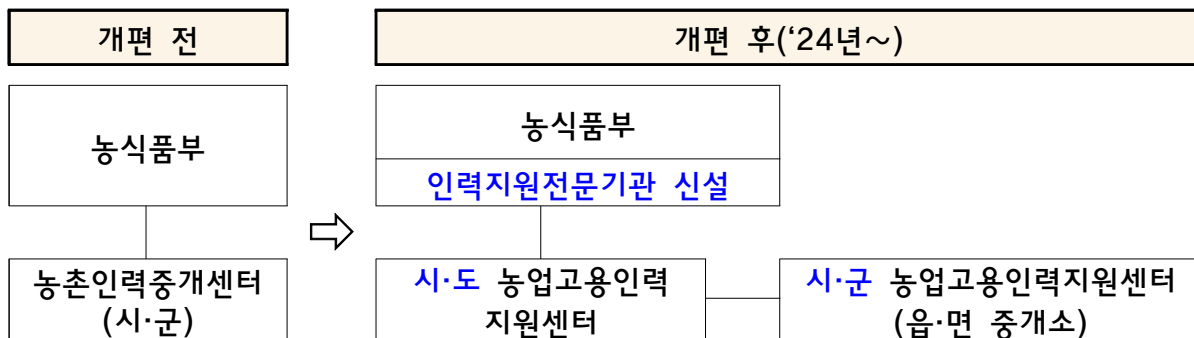
* 농업인력 수급 현황 및 고용 실태조사('24), 5년 단위 농업인력지원 기본계획 수립('25~)

○ 농업인력 지원 컨트롤타워인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운영('24)

* 지역 인력지원센터 컨설팅, 농업고용인력 양성, 외국인력 선발교육체류출국 관리 지원 등 추진

○ 농식품부-지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농업인력지원체계 정비

<농업인력지원체계 개편(안)>



- 시·도, 시·군별로 1개의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지역별 인력수급 계획 수립, 구인-구직, 농작업 지도, 직업상담 등 종합지원업무 수행

○ 농촌인력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인력중개플랫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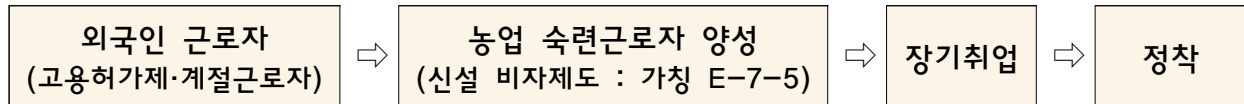
- 농업 분야 일자리 접근성 강화 및 고용인력 통계관리 등을 위한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고도화 및 서비스 개시('23)

* (기존) 단순 구인 공고 → (개선) 구인·구직자 온라인 매칭 및 알림 기능, 고용인력 이력 관리, 숙박 및 교통 정보, 사업 추진실적 관리 등 고용인력 이력 관리

□ 이민제도와 연계한 외국인력 장기취업 및 체류 방안 마련

- 중장기 외국인력 장기취업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 분야에 적합한 장기취업 체류자격 모델 마련('23)

< 농업분야 장기취업 및 정착 연계 방향(안) >



- 비전문인력(E-9)의 농업숙련기능 인력(E-7-4*) 전환 지속 확대

* E-9 비자로 5년 체류 후 요건(소득, 연령, 학력, 경력 등) 충족 시 전환(체류기간 제한 없음)

-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과 연계한 농업 적용방안 마련(법무부 협업)

*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의무거주 및 취업 조건 거주(F-2), 동포(F-4) 비자 발급

□ 농업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국내·외국 인력 공급 확대 및 제도개선

- 국내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도시지역·비농업인 대상 구인활동을 강화하여 체류형 영농작업반 및 인력중개 활성화

* 인력중개(만명): ('23) 100 → ('27) 130 / 체류형 영농작업반 운영(개소): ('23) 30 → ('27) 50

- 고용부와 MOU 체결('23.1.) 토대로 도시 근로자 유입 확대

-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 확대

* 고용허가(천명, 체류인원포함): ('23) 25 → ('27) 40 ** 계절근로(천명): ('23) 24 → ('27) 40

-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확대 추진('23: 19개소 → '27: 34)

- 농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제도 개선 추진

- 농업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 확대 추진('24)

-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 확대(음식점업 등)

-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現 E-8, 5 → 10개월 이내) 추진('23)

라

농축협의 경제사업 강화

◆ 조합 제도 및 평가기준 개선 등을 통해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 확대

* 경제사업 최저의무기준(%): ('22) 20 → ('23) 25 → ('25) 30

□ 농축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에서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 도시조합*이 농촌조합의 경제사업 및 도농상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추진

* (예)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 또는 특광역시에 소재한 조합 중 전년말 총자산 5천억원 이상인 조합

자금지원	▶ 도시조합의 신용사업 수익 일부를 농산물 판매 촉진 및 농촌조합 대상 자금지원 등에 활용
도농사업 활성화	▶ 도농 공동투자사업 출자, 농촌 조합에 판매공간 제공 등 농촌조합의 농산물 판매 및 경제사업 강화 지원

- 도시조합 경제사업 목표 설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해 「도시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3, 농협경제지주)
-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 모델 발굴, 도농 공동사업 지원 및 이행평가 체계 구축

▶ (경제지주) 도시조합 경제사업 목표 설정, 지원방안 마련, (도시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중앙회) 이행상황 평가

□ 농축협 경제사업 이행기준 상향 및 지원자금 관리체계 마련

- 농축협이 총 매출액 중 일정 비중 이상 경제사업을 이행하도록 의무기준을 상향하고, 미이행 시 제재 강화

* 경제사업 최저의무기준(%): ('22) 20 → ('23) 25 → ('25) 30

- 농협중앙회가 운용 중인 유통지원자금('22: 19개사업 4.9조원 규모) 성과 관리 및 평가·환류 체계 구축('24: 시범사업)

4.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 정책 여건

- 디지털 기술 기반 온라인 유통이 확대되는 등 유통·소비 환경 변화
 - * 농축수산물 온라인쇼핑 거래액(통계청): ('18) 29,405억원 → ('19) 37,230 → ('20) 65,612 → ('21) 83,334
- 과잉·과소 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이 지속되나, 생산자의 자율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사후 개입 중심의 정책은 실효성 부족
-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 관리, 원산지 단속, 가축 방역 등에 대한 소비자 요구 확대 전망
 - * 신선식품 구매시 중요 고려요인 '건강·안전' 응답률(농진청): ('20) 56.4% → ('22) 79.6
- 소득 양극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영양·건강 불균형 심화

□ 2023~2027 정책 추진 방향



- 농산물 거래방식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
 - * 유통비용 절감(%): ('20) 47.5 → ('27) 44.7(△6.0%, 2.6조원)
- 주요 농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관측 정확도 제고 및 생산자 중심 자율적·선제적 수급 관리체제로 개선
 - * 주요 채소류 가격변동률(%): ('18~'22) 14.4 → ('23~'27) 13.4
-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 부적합 먹거리 유통 사전 차단 및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 원산지 표시/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 확대(개) : ('22) 651/18 → ('27) 670/30
- 농식품 바우처 등을 통한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지역농산물 조달 기반 확충 등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4-1. 농축산물 유통구조 및 수급관리 체계 개선

가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 농산물 유통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생산·유통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 혁신 기반 조성

* 유통비용 절감(%): ('20) 47.5 → ('27) 44.7(△6.0%, 2.6조원)

□ 산지 유통의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 APC 및 물류허브 구축

- 주요 품목 주산지에 스마트 APC를 구축(~'27, 100개소 목표)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육성(~'27, 3,000개소)



상품화 과정을 수작업에 의존하는 일반 APC



작업 과정을 자동화·데이터화한 스마트 APC

- 산지 대규모 통합물류를 위한 스마트 물류허브 구축 검토

□ 농산물 도매거래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정보 공개 강화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23: 설립 → '27: 도매거래량 20% 온라인 전환) 및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 규제 완화
 - 「(가칭)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3)
- 도매시장 전자송품장 도입('23: 가락시장 시범 도입 → '27: 의무화) 및 시장별 적정 출하 유도를 위한 「출하·구매예측시스템」 구축('23)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각 단계별 농산물 거래정보를 표준화하고, 민간에 공개하는 「유통정보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24)

나

농축산물 자율적 수급 관리체계 구축

- ◆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농업관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자조금단체(생산자)·주산지(지자체)의 자율적·선제적 수급 조절 체계 구축

* 농업관측정보 신뢰도(%): ('22) 84.4 → ('27) 87.0

□ 생산자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농축산 관측 고도화

- 농산물 실측조사 품목 확대 및 다양한 과학데이터*를 활용하여 면적·생육·생산량 등 조사의 정확도 제고

* 기상·토양 실시간 계측장비(마늘·양파 26개소), 드론 항공촬영(고랭지·월동채소) 데이터 등

<실시간 토양 정보 수집 센서>



- 축산물 소비정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축산 관측 고도화

* 소비자패널(3,000명) 가구당 소득수준, 주기별 축산물 구매량(액) 등 구매정보 활용

□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조금 제도 개편

- 농산의무자조금 확대 추진('23: 18개 → '27: 21) 및 자조금단체(생산자)·주산지(지자체)의 선제적·자율적 수급 관리 강화

- 정부-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지자체간 참여·협력을 통한 적정 재배 면적 관리체계 구축 및 가격 위험관리 고도화 추진('23)

* 매년 적정면적에 대한 합의(Consensus)에 기반하여 사전면적 조절(자조금단체), 채소가격안정제 개편 및 가입률 확대 등 가격위험관리 지원(정부·지자체)

- 각 자조금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자조금 평가체계 개편, 유사 품목별 사무국 통합 운영 등 운영효율화 방안 마련('23)

* 품목 특성에 맞게 핵심목표(수급조절, 소비촉진, 수출확대 등) 설정 및 이행계획 등 수립

- 지역특화품목 등에 대한 지역자조금 도입 추진('24 법개정)

-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자조금법」 개정('23)

다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 생산자·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

* 주요 채소류 가격변동률(%): ('18~'22) 14.4 → ('23~'27) 13.4

□ (곡물류) 쌀은 적정 생산(감소), 전략작물은 생산 확대

- 쌀 소비량 감소* 등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감안, 쌀 적정 생산 및 소비 촉진을 통해 수급균형 달성(자급률 목표 98.0%)

* 1인당 쌀 소비량: 지난 10년간('13~'22) 연평균 △1.9% 감소

- 전략작물은 높은 수입의존도로 국제곡물 수급불안 발생시 국내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하여 생산 확대 및 해외 공급망 확보 강화
 - 특히, 쌀 다음으로 1인당 소비량이 많은 밀·콩의 국내 생산 확대에 주력

□ (채소류) 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확대 및 출하조절시설 확충

- 가격변동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확대하고 품목·작형별 구분·관리

*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 , 평년 생산량 대비): ('22) 17 → ('27) 35

-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시설채소(오이, 호박 등) 계약재배 확대

* 과채류 계약물량(천톤): ('22) 60(평년 생산량 대비 4.5%) → ('27) 130(10%)

-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하여 주요 노지채소(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의 출하조절시설 건립지원 확대 추진 및 수급조절 매뉴얼 개편

* 출하조절시설 건립 지원(개소): ('22) 7 → ('27) 18

□ (과수·화훼) 계약재배를 통한 수급조절 강화 및 생산기반 조성

- 주요 과실(사과, 배, 감귤)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출하시기 분산 및 품종 다양화를 위한 과수 신품종 특화지구 조성('24~, 매년 1개소)

* 과실류 계약물량(천톤): ('22) 109(평년 생산량 대비 7.7%) → ('27) 142(10%)

- 규모화된 화훼 생산지역에 유통·가공·소비 등 인프라를 집적화한 화훼산업 진흥지역 육성 추진(~'27, 5개소)

□ (한우) 송아지 계약 생산제도 도입 추진 및 단기 사육방식 정립

- 3년 후 한우 도축 물량을 적정 규모로 조절하기 위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송아지 생산 또는 중단 지원하는 방안 검토

<사업추진 방안(예시)>

- ▶ (3년 후 공급과잉 우려) 가임 암소의 송아지 생산을 1년 동안 중단
- ▶ (3년 후 공급부족 우려) 송아지 생산 ⇨ **계약을 이행하면 일정수준 인센티브 지원 검토**
- ▶ 한우는 임신~출하까지 장시간(40개월)이 소요되어, 수급불안이 발생하기 3년 전 송아지 생산을 조정하여야 3년 후 소고기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 가능

- 한우 단기사육 모델 정립*('22~'24)을 통해 사육기간을 단축(30개월 → 24~26)하여 생산비 절감 및 가격 안정 유도

* 유전능력, 영양수준 및 사육기간에 따른 단기사육 최적화 사양관리기술 확립

□ (돼지) 돼지고기 가격의무신고제 및 부분육·선도거래 방식 도입

- 돼지고기 수급 상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직거래 가격 의무신고제도 도입(법적근거 마련, '24)
- 돼지 부분육 경매 도입 등 부위별 유통을 확대하고 예약 선도거래 등 새로운 거래 방식을 도입하여 시장가격 예측 강화('24)

□ (가금) 공정·투명한 거래를 위한 계란 공판장 확대 및 자조금 활성화

- 식자재·재포장 업체의 온라인 거래 참여 확대, 계란 공판장 추가 개설(3개소 → 5, '23) 및 공판장 거래 물량의 점진적 확대*

* ('22) 전체 유통물량의 3% → ('25) 10% 이상

- 토종닭 별도 자조금 조성 및 닭고기 자조금 거출 방안 개선

□ (우유) 지속 가능한 낙농업을 위해 개편된 원유가격 결정체계 안착('23~)

- 원유를 용도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 생산비와 시장상황에 따라 기본가격을 결정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개편

4-2. 안전한 고품질 농식품 공급

가

사전 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 농축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합품 유통 사전 차단

*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률(%): ('23) 98.5 → ('27) 99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성 검사 적합률(%): ('23) 99 → ('27) 99.5

□ 부적합 품목 중점관리 및 지도·교육 강화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

○ 부적합 발생 상위 시·군 대상으로 PLS 시행반 확대* 운영 및 농약 오남용 우려가 큰 품목·작목반 대상 농약안전관리** 집중 교육

* 농업인 지도·교육을 위한 PLS 시행반 확대 운영(10개 시·군 → 25)

** 품목별 등록 농약 안내, 동일 농약 성분 반복 사용 금지, 금지농약 수거·폐기 등

○ 부적합 다발생 품목 및 온라인·직거래 납품 농가 중심으로 잔류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강화

□ 축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및 스마트 관리 체계 도입

○ 동물용의약품 허가품목 확충 추진('22~'27, 150개) 및 축산물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도입('24)

○ 농장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확대를 위한 사업 개선('23)

* 축산 전업농가 HACCP 인증률(%): ('22) 42.7 → ('23) 43 → ('27) 50

○ 도축·집유 단계의 온도, 세척 등 중요 안전관리 요소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HACCP」 도입

-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추진('24~'25)

<스마트 HACCP>



수집·연계되는 빅데이터 분석

나

원산지 표시 등 소비자 신뢰 확보

◆ 수입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 단속 강화 및 소비자 참여 확대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개): ('22) 651 → ('27) 670

*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개): ('22) 18 → ('27) 30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확대 및 부정유통 단속·관리 강화

○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22: 18개 → '27: 30) 및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22: 651개 → '27: 670) 확대

○ 민관 협업을 통한 통신판매 농산물 부정유통 모니터링 강화

* 사이버단속반/명예감시원(명): ('22) 50/230 → ('27)300/500

□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 및 관리체계 고도화

○ 모바일앱, 인터넷 등 주요 통신판매 매체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방법 구체화

* '가격표시 주위에' → '가격표시 바로 옆·위·아래에 붙여서' 등으로 명확화

○ 통신판매중개업자(플랫폼)의 입점업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고지 의무 부여('23, 법 개정)

○ 소비량이 많은 가공식품(고추장, 알메주, 소고기, 밀가루 등) 중심으로 검정키트 및 이화학적 분석기법* 개발·보급

* 각 품목(품종)이 가지고 있는 특이·고유 성분 차이점을 활용하여 검정하는 기법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소비자와의 소통 및 정책참여 확대

○ 농식품 정책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모니터링, 참여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단체 소통협의체 등 민-관 네트워크 운영

○ 소비자단체와 협업하여 농식품 소비실태·가격정보 공동조사 정보 제공

다

가축 방역체계 고도화 및 민간 책임성 강화

◆ 방역 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하여 정밀방역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고 정부 주도에서 농가·계열사·단체·지자체 책임성 강화

* 주요 가축전염병발생률(%): ('22) 0.34→ ('27) 0.30

□ 방역 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하여 정밀방역 체계로 전환

- 과거 발생 여부, 축산차량 통행량 등 발생 위험도·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방역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차별화된 방역조치* 수행('23~)

* 예찰·소독·검사 강화, 살처분 범위 확대, 소규모 농가 수매·도태, 조기출하 유도 등

- 방역 위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위험도 증가시 선제적 조치 수행

* 거점소독시설을 통과하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방문 시 해당 농장에 정보제공 등

□ 농가·계열사·단체 등 민간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중장기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대책 수립('24)

- 계열사가 계약 농가의 방역관리를 위해 차단방역 프로그램 운용, 계열사의 방역관리 미흡시 과태료 등 처벌 강화

- 축산단체 주도로 농가교육·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원

- 방역관리가 우수한 농가는 보상금을 상향 적용하고 민간검사기관 육성 및 방역 관련 민간 전문업종 신설(살처분업 등)

□ 인수공통전염병 및 신규전염병 대응 능력 강화

- AI, 광견병, 원숭이 두창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내외 및 부처간 협업(가칭 「원헬스(One-Health) 위원회」 구성) 체계 마련('24)

- 소 렘피스킨병 등 신규 유입가능 전염병 관련 사전 대비 강화

* 발생국 수입 차단 등 유입방지, 사전교육·백신비축,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등

라

고품질 농식품 공급

◆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에 대응해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고, 농산물 생산환경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

* 친환경농업 면적 비중(%): ('21) 4.9 → ('27) 10

* 유기축산 농가/출하량목표(호/만톤): ('21) 124/5 → ('27) 180/8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유통·소비 활성화

○ 친환경 농지 비중이 높은 지역을 집적지구로 지정하여 시설·장비, 유통 컨설팅, 농가 교육 등 집중 지원 추진('22: 20개소 → '27: 120)

○ 친환경 농산물 시장 확대를 위해 「디지털 유통정보 플랫폼」 운영('25~) 및 환경부 녹색제품 지정* 추진

* 공공기관의 장에게 녹색제품 구매 의무 부여(녹색제품구매법 제6조)

○ 친환경농업 규모화·집단화 및 환경 개선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 개편

□ 친환경축산 농가 지원 강화 및 판매 확대('27까지 유기축산물 시장 1.5배 성장)

○ 무항생제·유기축산 제도개선, 판로지원, 방목생태축산·저탄소인증제 연계 강화 등으로 친환경축산 활성화

* 무항생제가공식품 표시기준 개선, 유기축산물인증제도 완화 등

○ 전문 온라인 매장 활성화 및 품목 다양화 등을 통해 소비 시장 확대

□ 농산물 우수관리(GAP) 확대 기반 조성

○ 대형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GAP 농산물 유통실태를 조사해 현장 수요에 맞도록 인증 기준 정비, 판매 촉진·홍보 등 계획 수립('23)

- 저장성이 높고, GAP 인증면적 비중이 높은 품목('21: 배 41%, 사과 38% 등) 중심으로 대량소비처 GAP 농산물 취급 비중 단계적 확대('24~)

○ 안정적 GAP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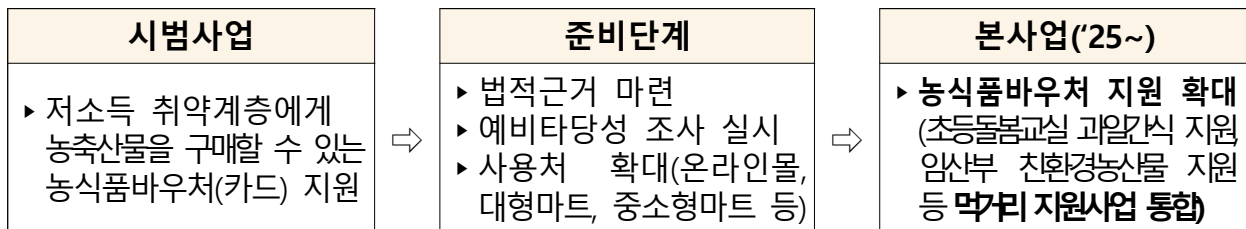
4-3.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

◆ 취약계층의 영양·건강 개선 등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확산

* 지역먹거리 지수 상위 등급(S~A) 지자체(개소): ('22) 15 → ('27) 74

□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강화

-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지속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농식품바우처 지원 확대('25~, 먹거리지원사업 통합)



-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꾸러미 배송, 방문판매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먹거리 접근성 강화



□ 지역먹거리가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는 선순환 체계 확산

-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정도를 가늠하는 지역먹거리 지수 활성화를 위해 측정 대상을 도시지역까지 확대
- 민·관이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먹거리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먹거리 계획 수립」 확대

*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추진 지자체(개소): ('21) 111 → ('27) 172

□ 공공 급식의 지역먹거리 조달 기반 확충

- 지자체를 중심으로 학교, 군대,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을 통합·관리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추진
- 온라인으로 공공급식 수요기관과 공급처를 연결하는 「공공급식 통합플랫폼」 사용기관 확대('23: 50개소 → '27: 80)

5.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 정책 여건

- 대도시·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 농촌의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농촌 소멸 위기 심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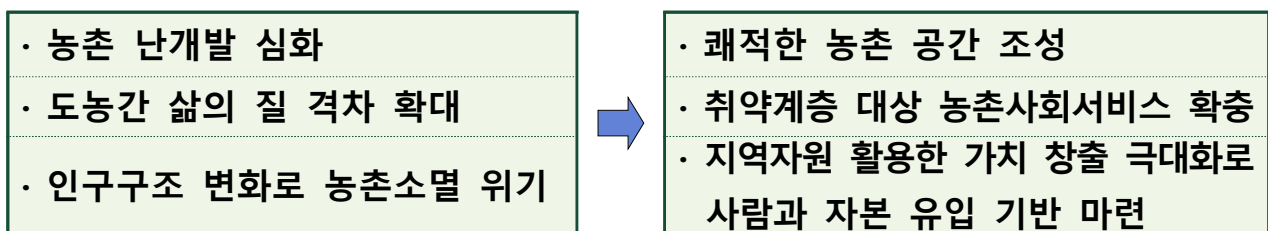
*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개소, keis): ('12) 73 → ('15) 80 → ('21) 98 → ('22) 104

- 공장·제조업체·축사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농촌 경관 및 환경 악화

* 농촌주거지 내 또는 100m 이내 입지한 축사는 전체의 22%, 공장은 30%(KREI)

- 농촌은 도시에 비해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 생활서비스가 취약

□ 2023~2027 정책 추진 방향



- 농촌 주민, 도시민을 위한 쾌적한 농촌 공간 조성

- 지자체와 주민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및 통합 지원

* 농촌재생프로젝트(개소, 생활권): ('23) 53 → ('27) 200 → ('31) 400

- 주민·민간 협력 등을 강화하여 농촌 정주 여건 개선

- 주민 등이 연대·협력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여성농, 고령농 등 취약 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확대

* 사회서비스 관련 농촌 공동체수: ('22) 105개소 → ('27) 260

- 농촌 지역의 특색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 관광객수: ('23) 1,040만명 → ('27) 1,540

5-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가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 및 농촌 재생 지원

◆ 농촌공간계획 제도적 기반 마련 및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으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

* 농촌재생프로젝트(개소, 생활권): ('23) 53 → ('27) 200 → ('31) 400

□ 농촌 공간계획 제도적 기반 마련

○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24) 등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 주요 내용: 중장기계획 수립, 농촌특화지구도입, 농촌협약, 주민협정, 지원기관 등

○ 농촌 난개발 방지 및 기능별 시설 집적화를 위해 「농촌특화지구」 도입('24)

* 지구 지정 범위 설정, 지구 내 허용시설 종류, 지구 지정 절차 등을 포함한 농촌 특화지구 운영방안 마련('23)

- 농촌의 일정 지역을 기준에 따라 구획화(zoning)하여 7개 유형으로 농촌 특화지구 지정

① 농촌마을보호지구, ② 농촌산업지구, ③ 축산지구, ④ 농촌융복합산업지구, ⑤ 재생에너지지구, ⑥ 경관농업지구, ⑦ 농업유산지구

- 농촌주민은 주민협정*,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지구의 지정과 운영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시장, 군수가 지구 지정

* 마을 또는 생활권 주민 간 사업방식에 대한 약속(예, 지붕 색깔 통일)



축사 등 무분별한 입지로 난개발된 농촌



정주기능이 강화된 농촌마을보호지구

□ 농촌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농촌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 농식품부는 국가 차원에서 농촌 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방침 수립('23)
- 시·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시행계획 수립('27까지 전체 시·군)
- 계획-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향후 농촌지역 개발지원 사업은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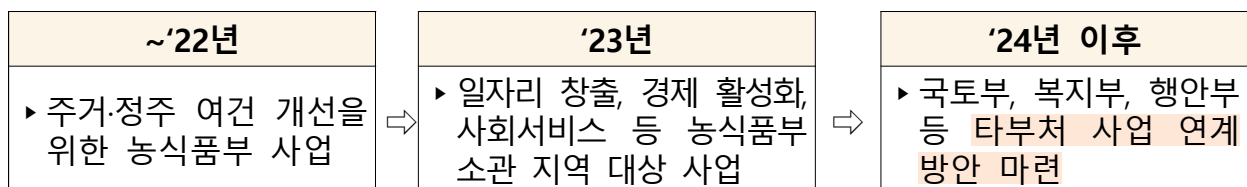
□ 농촌 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 및 지원 확충

- 농식품부 내 농촌 공간계획 업무를 총괄하는 「농촌재생지원단」을 신설('24)하고 지자체의 농촌 공간계획 전담 조직 설치 유도
- 지역 주민, 지자체의 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 지정 확산
 - * 중앙지원기관: 기본계획 평가, 재생사업 평가 및 예산 협의 등 지원
 - * 시·도, 시·군 지원기관: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재생사업 예산 관리·점검 등

□ 정부-지자체 간 「농촌협약」 체결 및 농촌재생프로젝트 확대

-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는 통합 예산 지원을, 시·군은 계획의 이행을 약속하는 「농촌협약」 체결 확대
- 농촌협약을 기반으로 농촌 재생사업 통합 지원(농촌 재생프로젝트)
 - * 농촌재생프로젝트(개소, 생활권) : ('23) 53 → ('27) 200 → ('31) 400

- 농촌협약 통합지원 대상 사업을 타부처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개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 대상·지원 요건·절차 등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통합지침」 마련('24)

농촌 정주여건 개선

◆ 주거 여건 및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여 청년, 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

* 생활SOC 확충 조성(개소, 착수, 누계) : ('23) 900 → ('27) 1,250

□ 노후주택, 빈집 등 농촌 노후주택 10만호(5+5) 정비(~'27)

- 농촌 주거실태·추세 등을 분석하여 「중장기 주거지원 로드맵」 수립⁽²³⁾

* 빈집 등 노후주택 5만호 철거 및 양질의 주택(개량, 신축) 5만호 조성

- 빈집신고·등록제 도입, 자발적 빈집 정비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여 「(가칭)농촌 주택 및 빈집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²⁴⁾

☐ 농촌 지역에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향상

- 농촌 주민수요 등에 기반한 서비스 거점 조성 확대를 추진하여 문화·복지·교육 등 생활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생활SOC 확충 조성 추진(개소, 착수, 누계): ('22) 797 → ('23) 900 → ('27) 1,250



하나의 건물에 복지·생활 편의시설 복합화



일정 구역 내에 서비스 제공 시설 단지화

- 중심지와 떨어진 배후마을 농촌 주민들을 위하여 버스 등을 활용한 물리적 연계 등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 서비스 전달 프로그램 운영, 농촌지역 82개 시군에 농촌형교통모델 지원 등

☐ 청년 농촌 거주 지원 및 주거개선을 위한 범부처·민간 협력 강화

- 스마트팜 등 일지리와 연계한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 추진(~'27, 43개소)

-
- 법정부 협업 및 민관협력 확대**
- 로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

*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봉사활동 사업, 빈집 재생사업 등에 민간참여 유도

5-2. 농촌 맞춤형 사회서비스 보장

가 농촌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 농촌 특성을 반영한 의료·돌봄 등 기초 생활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체계 등 제도 기반 마련

* 사회서비스 관련 농촌 공동체(개소): ('22) 105개소 → ('27) 260

□ 의료, 돌봄 등 농촌에 부족한 필수 생활 서비스 지원 강화

○ 방문진료 등 농촌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개발·확대

- 찾아가는 의료·복지 서비스(농업인 행복버스) 개편*('23~) 및 농촌형 의료 서비스사업 추진('24)

* 병·의원 부족한 지역 우선 지원 등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기능 개편

- 농촌 원격의료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검토('24~, 의료법, 복지부 협의)

○ 서비스 공동체, 돌봄 마을 등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

- 고령자 등이 농촌 지역에서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농촌 돌봄마을 조성 확대 및 민간 분야 협업 강화



<농촌 돌봄마을>

- ▶ 고령층 등 주민 대상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실정에 따라 각종 복지시설을 복합화
- ▶ 전문 의료·보건, 학교 등 지역 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분야 프로그램 제공

- 농촌 주민을 중심으로 서비스 기관, 업체 등이 연대·협력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확산 추진('23: 30개소 → '27: 100)
-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치유,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 육성 추진('23: 100개소 → '27: 160)

□ 농촌 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체계 마련

- 서비스 활성화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한 국가·지자체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23)

*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서비스 제공 주체를 육성하고 현장 및 민간 조직들의 협력을 촉진하면서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국·지역 지원기관 설립('24)
- 농촌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서비스 협약 제도**」 도입('24)



<사회서비스 농촌 공동체 사례>

- ▶ 홀몸노인 반찬나눔 및 안부 확인 등 방문서비스 제공
- ▶ 집수리업체 연계하여 주택 안전 장치 수리 등 서비스 제공

□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 생활 보장

- 농지연금에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 도입, 배우자 승계 연령 인하(만 60세 이상 → 만 55세)** 등 상품 개선('23~)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으로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월지급금 5% 추가 지급

** 농지연금 가입연령 인하('22, 만65세이상 → 만60세)에 맞춰 승계형 가입가능 연령 인하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의 건강·연금보험료 지원금 지속 확대**

* 건강보험 세대당 월 최대 지원금액(원): ('22) 103,520 → ('23) 105,090

* 연금보험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원): ('21~'22) 45,000 → ('23) 46,350

□ 농특위 역할 확대로 생활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 농촌 의료, 복지, 교육, 문화 등 협력 분야의 의제화·논의·평가 및 환류 등 전 과정을 농특위가 주관하고 관계부처 정책·사업 확대 추진

- 총리 소속 「**삶의 질 위원회**」 기능을 대통령 소속 농특위로 이관('23)

나

여성농업인, 농촌 여성 지원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복지증진 및 농촌양성평등 확산

*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수혜인원(만명, 누계): ('23) 1 → ('27) 5

□ 여성의 농작업 여건개선 및 전문성 강화

- 여성농업인 영농 여건 개선 교육, 여성친화형 농기계·편이장비 지원을 통한 노동 부담 경감
- 결혼이민여성의 직업역량 강화 등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 여성농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 서비스 지원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한 특수건강검진 확대 추진('24~)

* 만 51세~70세 여성농업인 대상

* 여성농 농작업 질환예방·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취약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2년주기)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 농작업과 가사 지원을 위한 영농도우미 및 행복나눔이(가사) 확대

* 영농도우미 지원일수(단가): ('22) 10일(80천원) → ('23) 10(84) → ('27) 12(120)

* 행복나눔이(가사) 지원일수(일): ('22) 12 → ('27) 24

□ 미래세대 여성농업인 육성 및 농업·농촌 성평등 문화 확산

- 도시 청년 여성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한 직업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시골언니프로젝트)** 농촌에 정착한 선배여성(시골언니)을 중심으로 농촌살이 체험 및 정착 네트워크 형성 지원



- 농촌형 성평등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농촌 양성평등 교육 확대

5-3.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가

농업·농촌 소득기반 다각화

◆ 농촌융복합산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촌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수(개소): ('23) 2,294 → ('27) 2,814

* 농촌 관광객수(만명): ('23) 1,040 → ('27) 1,540

□ 창업가 육성, 성장단계별 지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 유망한 경영체를 인증하고 판로, 컨설팅, 자금 등 맞춤형 지원

- 농촌지역 입지, 지역산 원료 사용 등 최소한의 인증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예비후보군으로 선정하여 인증경영체로 성장 지원

* 예비후보군에게 컨설팅, 박람회·품평회 참가 등을 지원하고 본 인증 시 가점 부여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운영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자금 지원 강화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가 육성을 위해 민간 창업 엑셀러레이터와 연계하여 지역 기반의 예비창업자 커뮤니티 지원('24~)

* 창업·보육, 컨설팅, 멘토링 등 지원을 집중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 농촌관광 체질 개선을 위해 프로그램 다변화, 규제개선 등 추진

○ 개별·가족 단위 등 소그룹 관광 트렌드 대응을 위한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확대 및 농촌관광 정보 제공 강화

* 소규모 체험프로그램('27: 320개), 체류형 콘텐츠('27: 73개)

-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에 농촌관광 정보 제공 및 상품 판매 확대('23~)

○ 차박, 캠핑을 농촌관광 상품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야영장업 등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캠핑장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원('24)

* 체험휴양마을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소규모 캠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 마을사무장의 교육·컨설팅을 강화하고 농촌관광 특화인력* 육성

* 농촌관광 분야(기획, 운영 등) 종사를 희망하는 관광학과 대학생 대상 실습지원 시범 추진('24~)

나

귀농·귀촌 활성화

◆ 체계적인 준비, 정착 지원 강화로 귀농소득·귀촌생활 만족도 향상

- * 귀농 5년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까지 향상(%): ('21) 88 → ('27) 95
- * 귀촌 가구 생활 만족도 향상(%): ('21) 76.2 → ('27) 85

□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사전준비 지원체계 확충

-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규모를 확대하여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다양한 실습·체험 기회 제공(최장 6개월)



< 귀농귀촌 사례 >

- ▶ 박○○씨(31세)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 취득
- ▶ 팀원으로 만난 동료와 함께 제천시 덕산면으로 귀촌 지역 내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목공방 운영

- 지역·품목 등 유사한 관심을 지닌 도시민들이 상호 교류하며 준비·실행·정착까지 이끌 수 있도록 「**준비 커뮤니티***」 지원 확대

* 귀농·귀촌누리집 회원 대상으로 10개 커뮤니티 지원('23), 성과 확인 후 확산 추진

- 도시민이 거주지에서 쉽게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농협을 활용(85개소)한 전문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양성(年 40명)하여 도시자산 정리,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 제공

□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농촌 정착 기반 마련

- 귀농·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여러 기관의 정책, 농자주거, 일자리, 문화복지 정보서비스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 제공('23~)

- 정착 초기 귀농인의 농지·주거 등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귀농창업 자금(융자) 지원조건 개선(금리 인하, 2%→1.5)

- 농촌지역 농협(127개소) 내 「**영농 네비게이터***」 운영(年 50명 양성)

* 정착 초기 귀농인에게 판로·경영·비품구입 등 영농 전반에 대한 1:1 컨설팅 제공

다

농촌 교류·체류 활성화

-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농촌 교류·체류 확대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농촌 이주 유도

*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천명): ('22) 84 → ('27) 650

□ 농촌 교류·체류 확대를 통한 사람과 자본 유입 기반 마련

- 농촌 지역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농촌 체류 유치를 위해 「농촌형 위케이션」 모델 개발·확산('24~)
- 유희·저활용 시설 등을 업무·체류 인프라로 개선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동 및 지역공헌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농촌 장기체류 유도



<제주 세화마을>

- ▶ 지역 유희공간(마을 종합복지센터)을 활용하여 카페, 숙소, 공유 오피스 구축 및 5G와이파이 등 인프라 확충
- ▶ [위케이션 인프라 확충 및 상품운영] 세화마을협동조합 + [기업유치 및 마케팅] 스트리밍하우스(위케이션 플랫폼 운영기업)

-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관계인구*를 활용한 농촌 활력 제고 방안」 마련('24)

* 정기·비정기적인 방문, 단기 체류 등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 농업·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교류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산림 치유·휴양 인프라 확충 및 노년층 산림치유 프로그램 확대 추진
 - * 치유의 숲 조성(개소): ('22) 45 → ('27) 75
 - *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한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시설(개소): ('22) 14 → ('27) 73
-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중앙·광역 거점기관 구축('27: 중앙 1, 지방 17) 및 치유농업 전문인력·시설 인증 확대 추진
 - * 치유농업 전문인력/인증농장(~'27): 2,150명/ 500개소
 - *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천명): ('22) 84 → ('25) 400 → ('27) 650

V. 농정 추진기반 정비

1. 혁신 농정

◆ 조직 개편 등 추진 기반 정비 및 민간의 창의, 혁신 역량 극대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 미래 농정수요, 국정과제 대응을 위한 농정 조직 전면 개편
 - 식량안보, 농촌재생 등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
 -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신성장산업을 총괄하는 '농업혁신정책실'과 동물복지, 탄소중립 업무를 관장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설치
- 농식품 분야 중장기계획의 평가·환류 강화 및 수립 체계 정비
 - 발전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연차 평가 및 환류를 도입하고 지자체별 계획 수립·이행 현황에 대한 정기 점검 추진
 - 발전계획이 제시하는 농정 전략에 따라 분야별 중장기 계획의 효과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별 수립 및 발표 시기 조정
 - * 차기 농발계획 이행 시점('28~)에 맞추어 분야별 중장기 계획 추진 일정 검토
 - 유사·미수립 계획 등 분야별 계획의 통합·폐지(법개정 등, ~'27)
- 민간의 창의·혁신 역량을 극대화하는 규제 및 제도 개선
 - 농식품규제개혁전략회의(장관 주재) 중심으로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신
 - * 반려동물,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新산업의 시장 조성 중심
 - 미래농업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농촌 정의 재정립
 -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 트렌드를 반영하여 추진
 - * OECD 농촌 3.0 정의 유형: ①도시안 농촌, ②도시 근교 농촌, ③ 원격지 농촌
프랑스 농업인 정의: 농업인 자격을 조항별로 정하여 융통성을 부여
 - ** 국내외사례 분석('23) → 사회적 공감대 형성(~'24) → 정의 재정립('25)

2. 현장소통 · 지방중심 농정

◆ 현장의 이해와 신뢰에 기반한 정책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방농정의 지역 주도성 강화

□ 불필요한 정부위원회를 정비하되, 정책 소통 기능 강화

- 민간 참여 저조, 유사·중복 등으로 통합·폐지된 위원회의 기능 흡수를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23)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강화

* 농식품부 소관위원회 26개 중 17개 폐지.통합(65%)

- 삶의 질 정책을 이관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다부처 협업과제, 사회적 합의 필요 과제 등을 중심으로 의제화

□ 민간 주도의 자율적 · 상시적인 소통 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

- 학계, 업계, 언론, 정부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 활성화
- 학생, 농업계,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농정 홍보를 통해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 확산

□ 계획 체계에 기반한 지방 농정의 지역 주도성 및 역량 강화

-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발계획 및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정부 예산의 통합·포괄 지원으로 지자체 계획의 실행력 확보

* 사군의 농발 계획 농촌 공간기본계획을 농촌공간 시행계획에 사업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통합지원

- 지역 농정의 의사결정력과 기획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주민제안, 주민협정 등 주민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유도

- 중앙-광역-기초 단계별 농촌공간정책 전문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주민 및 지자체의 전문성 보완 및 지원

* 농촌공간정책 관련 연구, 계획수립지원, 주민협정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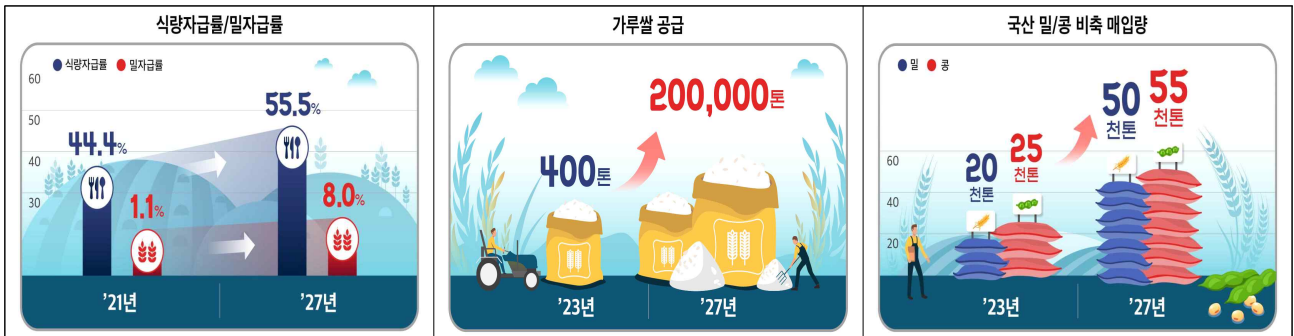
VI. 농업·농촌·식품산업 투융자 재원확보 방안

- 농식품분야 주요 투자 재원인 농특회계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출 효율화 추진
 - '24년 6월 30일 일몰 예정인 농어촌특별세의 연장을 협의하여 안정적인 농특회계 세입 및 농식품 분야 투자 재원 확보
 - * 연도별 농특세 수납실적: ('19) 39,182억원 → ('20) 62,596 → ('21) 89,000 → ('22) 70,132
 - 기존사업 중 실집행 부진, 재정평가 미흡 등의 성과미흡 사업의 구조조정 등 지출 효율화
 -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 기존사업의 세출 구조개편 지속 추진
 - 수출, ODA, 지역소멸 대응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방향 관련 농식품 예산규모 확대 추진
 - 식량안보 확보, 농업·농촌의 가치 등 농식품 분야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마련 지속
 - 관계부처 협업으로 추진되는 정책과제의 경우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예산확보 효율화
- 민간 기업의 자본력·기술력 활용하여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 간척지 대규모 첨단온실 조성 등 농산업 전후방산업 투자 확대
 - 농업과 기업의 다양한 협업모델 개발을 통해 기업의 농업참여 성공사례 창출·확산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펀드를 신규결성('23~'27년 1조원)하고 신뢰성 있는 투자정보 생산 및 공유 등 투자정보 접근성 제고

VII.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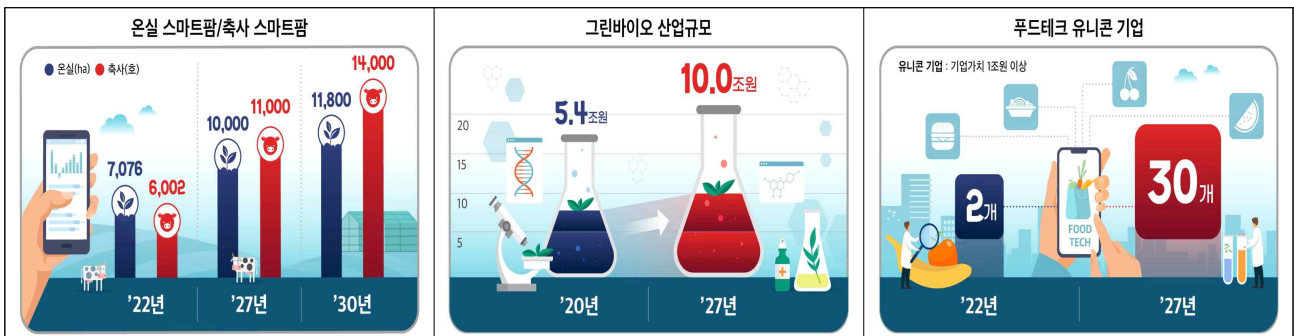
□ 굳건한 식량 안보가 강화됩니다.

-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 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이 제고되고, 공공비축 확대, 해외 공급망 확충 등으로 식량안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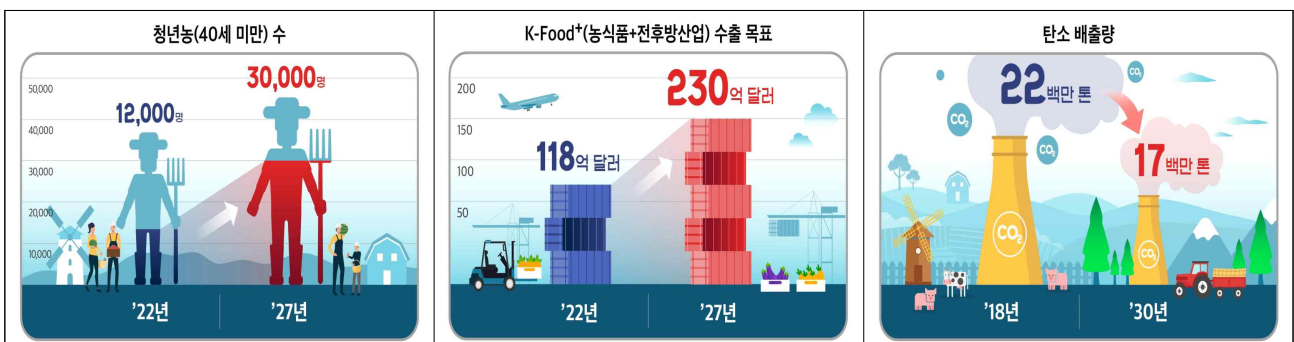


□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합니다.

- 스마트팜, 그린바이오산업, 푸드테크,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



-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 수출 확대 및 농산업 분야 탄소 배출량 감소 등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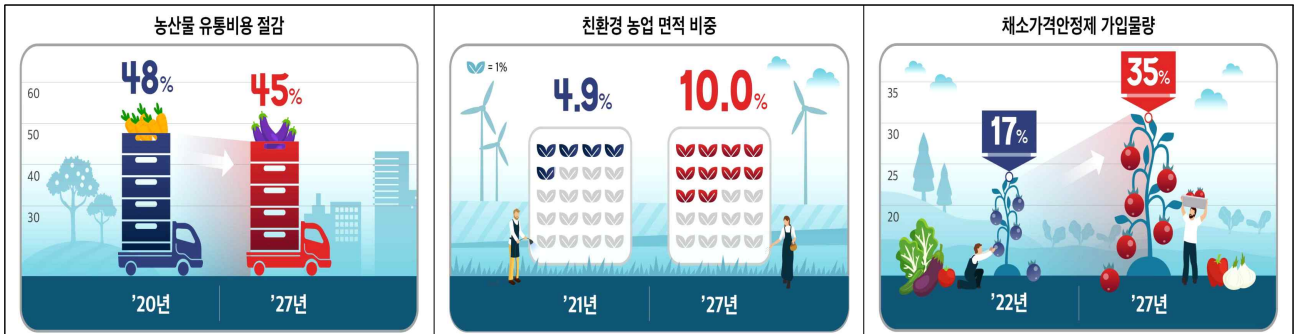
□ 농가경영 안전망이 두터워집니다.

- 재해보험, 직불 등 소득·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민간 투자 강화, 안정적 농업인력 공급 등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



□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생산자 중심 선제적 수급 조절로 농축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



□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이 조성됩니다.

- 농촌주민, 도시민을 위한 농촌다움이 살아있는 공간으로 재생하고 농촌 기본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

